

동서양의 평화사상

安 炳 茂(한신대 명예교수)

머리말

동서양의 차이를 짧은 시간에 쉽게 구별할 수는 없다. 동서양 모두 넓은 지역과 긴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를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 차이의 지적은 추상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평화라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동서양 사상의 차이를 찾으면 양쪽의 이원론을 비교해 보는 만큼 편리한 잣대는 없을 것이다.

1. 이원론의 이해

기독교를 골격으로 한 서구의 이원론은 적대적 영원한 평행을 이루고 있다. 이 평행은 어느 시점에서든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희랍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려는 사명의식을 갖고 세계정벌을 시도했는데 그 도상에서 중동아시아의 고대종교를 만나게 되었다. 이 고대종교의 골격은 철저 종말론이다. 이 철저 종말론의 구도는 이렇다. 이 세계는 악과 선이 영원한 적대관계를 갖고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바로 역사다. 그것이 적게는 다툼, 크게는 전쟁을 일으킨다. 이 선과 악이라는 분류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간의 육체가 악의 거처라면 정신은 선의 근거지다. 여기에 인간의 갈등과 고통이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평화의 길은 이 악이 영원히 제거될 때이다. 그것이 바로 철저종말론이다.

이 같은 중동아시아의 고대종교와 이성(Nus)을 중심에 둔 희랍사상이 로마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그레코로마라는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을 일러 헬레니즘이라고 한다. 이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이후에도 계속된 정벌영역과 그리고 로마의 판도에 그대로 전파되어 나갔다. 그 중에 팔레스틴 유다도 포함됐는데 유다교의 종말사상과 헬레니즘속에 전파된 이원론이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종말론이 형성됐다. 그리스도교의 전제인 예수는 바로 이 유다에 나서 이 종말론을 그의 사상의 중심에 두었다. 그러나 이원론의 철저화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

고 전 인류가 하나되는 궁극적인 평화의 현실인 하느님의 나라로 집약되었다.(마태 8,11) 예수는 국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이요, 지역으로 말하면 중동지방 출신이다. 그런데 헬레니즘 영역 구라파에서 발달된 그리스도교에서 이 평화사상은 후퇴되고 종말 사상 안에 담긴 이원론이 세계관, 역사관에 골격을 이루었다. 악의 근원은 사탄의 왕국으로 상징되고 선의 근원은 하느님의 나라로 상징되었다. 그러므로 두 세계에 공존하는 역사 현실에서는 갈등, 투쟁, 아니면 힘에 의한 정복으로 강자가 약자를 흡수하거나 유린할 수밖에 없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를 종교 중에서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종교가 되게 했고 서구 세력이 근세에 와서 세계를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 무모한 십자군 사건도 바로 그러한 구도에서 생겨난 것이고 갈등구조에서 계급 투쟁을 극단화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폭력혁명을 골격으로 하는 맑시즘도 결국 이러한 서구의 이원론에서 그 원천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동양의 이원론은 전혀 다르다. 동양의 이원론은 바로 음양 사상이다. 음과 양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적대관계를 이루어 영원한 평행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음은 양을 필요로 하고 양은 음을 필요로 한다. 음이 있어서 양이 가능하고 양이 있어서 음이 가능하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자 없이 여자를 생각할 수 없고 여자를 뺀 남자도 가능하지 않다. 이런 기본 사상의 바탕에서는 영원한 원수도 없으며 따라서 영원한 대결도, 모순도 없다.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 비록 원수 관계가 형성됐더라도 바로 그 원수마저도 내게 필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양의 이원론인 음양사상은 앞으로 시각에 따라 더 밝혀질 것이다.

이 이원론의 틀에서 몇 가지 시각으로 두 사상의 형태와 그 결과를 밝혀 보겠는데 전체 흐름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자세이다. 서구의 논리학은 A는 A이지 A는 B가 아니며 될 수 없다는 것이 바탕인데 이로써 A는 주격이라면 B는 객체다. 그런데 A는 영원히 A로 밖에 있을 수 없고 B와의 즉 다른 것, 대상과의 만남의 길이 막혀 있다. 그런데 저들은 나와 너(B)는 완전히 다르다는데 액센트를 두고 있다. 이런 시각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다음에서 볼 수 있다.

1. 자연관

내가 A인데 대해 자연은 B다. A는 B가 될 수 없기에 인간은 자연안에 살면서도 자연이 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공존의 운명을 가졌으면서도 언제나 갈등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자연과의 공존의 길은 정복 뿐이다. 그 정복의 자세는 원수를 정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자연정복이 개발이라는 형태를 띄고 마침내 오늘의 공업화시대로 까지 몰고 오게 되었다. 그 결과는 생태학에 위기를 가져오고 마침내 자연이 오염됨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처가 영원히 없어질 상황에 이르렀다.

저들이 자연을 관찰한 결론도 생존경쟁, 약육강식이라는 말로 집약했다. 즉 자연을 먹느냐, 먹히느냐의 각축장으로 본 것이다. 그런 눈으로 보면 자연은 결코 평화의 장이 아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은 그대로 두면 해로운 대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그것을 정복(개발)하여 변질시키는 의지로 형성된 것이 서구적 문화이다.

이에 대해서 동양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관계에 두고 있다. 가령 동양에서 자연과 사람을 총괄하는 개념으로써 기(氣), 맥(脈)등이 있는데 인간에게 맥이 있듯이 자연에도 맥이 있다고 본다. 산맥이 있고, 화산맥도 있다. 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전체를 뚫고 있다. 자연과 인간은 너,나로 구별하지 않는다. 사람을 살게 하는 기는 자연에 퍼져 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사람에도 있다. 사람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자연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과 자연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복할 수는 없다. 사람에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듯이 자연에도 살려는 의지가 꿈틀거린다. 곤충이나 사람만이 아니라 식물 아니 땅 자체도 살아 움직인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자르고 부수고, 즉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행해지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돌 하나 옮기고 나무한대를 베는데 얼마나 조심하며 무덤자리 하나를 찾는데 자연의 구조를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자연은 사람과 더불어 살며 사람이 의지해서 살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이 사는 것도 언제나 자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

동양은 자연을 인간의 본래 모습을 지닌 대상으로 보며 타락한 인간이 상실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본향으로 보는 것이다. 사람이 계속 다니므로 형성된 땅위의 길과 사람이 지킬 도리(道)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자연이 정복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시에 소유의 대상도 아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이 곧 인간이 사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서구인들의 이해와 땅의 정복, 그것은 곧 약한 민족 혹은 나라를 침범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에서 땅을 점령하는 역사를 회상해 보면 저들이 자연을 보는 시각이 마침내 사람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연이 경쟁의 장으로 보는 것은 바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전쟁에 의해서 노획한 권리를 정당화하려는 심리로 발전된 것이다. 동양인의 눈에는 자연은 인간의 스승이며 평화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자연은 평화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동양의 시인들은 서양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더 많이 자연을 노래한다. 불살생을 주장하는 불교도 이러한 자연에 대한 존엄을 나타낸 것이고 도교는 궁극적으로 무위라는 것을 인간의 상도(常道)로 삼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을 본받으라, 혹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자연존중의 철저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2. 윤리관

인간의 관계에서 윤리가 형성되는데 A는 A고 B가 아니라는 도식이 관철될 때, 그리고 나 아닌 B는 바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고가 발전되면 결국 윤리는 형성이 안되고 만다. 상대방을 언제나 대상으로 보는데 그럴 경우 그 대상은 내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해로움을 주느냐 하는 계산이 따르게 된다. 즉 상대방이 너로써 즉 나와 똑같은 주체로써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어떤 물건과 같이 용도에 의해서 평가되는 대상이 되고 만다. 이원론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치면 나와 이해관계를 달리하거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혈통으로 다른 자는 공존의 대상은 물론 아니고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원론적인 자세가 마침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배타주의를 합리화하게 된다. 언제나 나와 너의 공통성보다 나와 너의 차이점을 물음으로 나의 경쟁자 아니면 가해자, 나가서는 적으로 상정한다. 나 아닌 자(stranger)는 일단 관찰해 보고 감시해 보고 경계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출발한다. 이런 상태에서 관계가 꼬이면 사적 차원에서는 충돌을 일으키고 소 집단적 차원에서는 습격이 일어나고 종족이상을 넘어서

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소유욕이 바로 이 이해관계의 핵심이다.

자연에 음양이 있듯이 사람,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음양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동양의 윤리관은 이틀에서 골격이 잡힌다. 중국사상에는 자연과 인간을 꿰뚫는 다섯 가지 흐름, 맥이 있다고 본다. 오행(五行)이 그것이다. 오행은 자연형성의 골격일 뿐 아니라 인간, 그리고 인간사회의 질서이기도 하다. 오행은 물질적 요소인데 그것이 그대로 인간생리구조에도 적용되며 인간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을 보는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서구와 같은 의미의 노예제도는 있어서는 안된다. 까닭은 사람은 권리나 경제적 차이로 보다는 오행으로 한데 묶여 있기 때문에 공동운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윤리 질서는 계급이나 신분주의에 기울어 갈등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설정된 이 오행이나 오륜이 반드시 인간의 현실에 꼭 맞아떨어지는지는 문제이나 그것은 적어도 지배자와 피지배자, 나와 원수를 구별하려는 그런 질서가 아니고 더불어 마찰없이 살려는 질서를 구상한 것이다.

서구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他者)은 A는 A이지 B는 될 수 없다는 논리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거나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해서 동양에서는 공존과 협동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반려이다.

3. 정치관(국가관)

서양의 정치 내지 국가관의 형태를 결정한 것은 그레코 로마시대다. 회랍의 폴리스체제는 시민과 비시민, 다른 민족이나 다른 집단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체제이다. 폴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었다. 로마는 헬라를 정복하면서 문화적으로 헬라에 정복되었다. 그리고 회랍문화가 퍼진 길을 따라 그 판도를 폭력으로 넓혀 나갔다. 로마의 법은 지금 구라파의 법의 원조이다. 그런데 그 법을 지탱해 나가는 기둥은 폭력이다. 로마의 정치가이며 사상가인 시세로(Cicero)는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폭력을 빼고 어떻게 폭력을 어거할 수 있느냐”고 한 말은 유명하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와 접합하므로 이미 헬레니즘에서 깊이 뿌리를 박은 이원론에 의해서 국가라는 것이 절대권을 부여받았다. 그 이유

는 악의 세력을 절대화하므로 그것을 통제할 책임과 권한을 국가에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를 기독교적으로 수용한 토마스 아퀴나스(Aquinas)는 국가는 단순히 외적인 삶의 질서를 지켜주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 그리고 윤리행위도 완전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걸맞게 국가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란 결국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을 의미한다. (M.Weber)

그런데 마키아벨리(Machiavelli)에 와서 도덕적 사고나 요소를 정치에서 완전 제거 버리므로 정치 내지 정부는 힘의 집단으로 남게 되었다. 정부를 공적인 폭력, 민에 대한 주권, 압제, 권위, 설득 심지어는 칼이라는 말로 상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 동양의 정치관은 전혀 다르다. 공자는 가장 이상적인 시대를 요순치하(堯下)의 국가형태에서 본다. 그 성격은 비록 임금에 있으나 민은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의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가 일면 왕도정치를 구상하고 봉건주들을 설득하여 주나라 시대로 돌리려고 했으나 그것은 결코 중앙집권자로서 한 세력이 통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한 것이 아니라 세력싸움을 방지하고 인간을 가장 평화적으로 살게 하는 길, 즉 대표적인 사람의 덕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꾸려 나가는데 목적이 있었다.

도교는 이보다 훨씬 앞으로 나간다. 노자는 어떤 형태로나 중앙집권이 가능한 생활 양식을 거부한다.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는 조그마한 마을들이 새벽 닭소리를 들을만한 거리로 분산되어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그는 통치를 극도로 경계하여 윤리적 체제마저도 통치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함으로 마침내 무위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통치는 물론 덕치도 그에게는 경계의 대상이다. 불교도 그 원리로 보아 폭력이나 권력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체제로써의 국가를 생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조그마한 곤충의 살려는 의지마저도 존중하여 불살생을 신조로 삼는 마당,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물론 모든 생물에게까지도 불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서 민이 어떻게 일개 권력집단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사살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동양은 나라를 하나의 집으로 보고 있다. 국가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부모와 자식들 그리고 가까운 혈연이 함께 사는 집단이 나라라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를 전제한 것이다.

II. 동양평화 사상의 한국적 수용

한국의 특수성을 혼합주의로 본 사람들이 많다. 혼합주의는 우리의 다른 말로 한다면 조화(造化)라는 말이 어울릴 것이고 영어로는 harmony와는 다르다. 조화란 여러 가지 것을 수용하여 융광로 역할로써 제3의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 생산력을 의미한다. 유불선(유교, 불교, 그리고 선(도교))은 각기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이 한국에 모두 유입됐는데 이조시대에 정책적으로 유교를 국교로 삼으므로 불교를 배척한 것 외에는 서로 충돌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최치원이 전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특수한 현상인 화랑도의 성격은 화랑도의 자주적 정신을 유불선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분명히 다른 셋이 한 몸에 들어와 조화를 일으켜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전제이다.

한국에는 서구나 일본에서 보는 것 같은 봉건체제가 없었다. 그것은 역대로 왕권이 튼튼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해계모니를 추구하여 군할하려는 무리들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다. 가끔 민란은 있었어도 왕권에 대립한 다른 세력의 구심점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권력욕에 맛을 들인 왕권 주변에서 도는 일부를 제외하면 왕은 언제나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태평성세의 상징으로 섬기고 또 그런 것을 기원하는 대상이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가 들어 와도 민중의 종교인 무속에 의해서 조화를 이룩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무속을 잘 모르나 그 중심에는 기가 서있다고 판단한다. 이 기로써 모든 종교간의 담을 넘고 고통을 함으로써 피 억압자인 민중들의 한을 풀고, 관리들의 착취와 포악에 견디다 못해 폭발하는 폭력행위를 순화하는 길이 굿판이 놀이판으로 이어지게 함으로 축제를 통해 자기 분노의 승화를 꾀 한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부모의 원수를 찾아 땅 끝까지 헤매었다는 효자들의 무용담도 가끔 보이나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특이한 우정을 조화해 냈다는 이야기가 더 지배적이다. 우리의 탈춤도 성격상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 농노들이 언제나 놀려 살면서도 양반계급에 대한 분노를 삭히는 방법으로 연중 정해진 날에 민중의 축제를 벌인 것이 바로 탈춤판이다. 이 탈춤 판에는 양반도 상놈도 중도 무당도 등장하고 상놈을 대표한 말뚝이가 오늘의 언론기

관을 대표한다. 양반을 비판하고 종교계의 추태를 폭로하고 성문제를 공개한다. 말뚝이는 민중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위를 보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축제가 관료나 귀족들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통치수단의 하나였겠으나 공존의 불가피성을 전제하고 비록 구조적으로 지배, 억압하고 있으며 피 지배자는 말이 없으나 그들에게 쌓인 스트레스나 불만을 지배층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지배층은 저들을 가리켜 상놈이라고 했으나 그것의 본뜻이 한자로는 상(常)으로 저들만이 언제나 있어야 할 존재고, 있는 존재고, 있어야 할 존재고, 가장 정당한 길을 걷는(常道) 사람들이라는 뜻을 사실 인정하고 있다.

샤머니즘은 자연을 존중하는 동양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함에 그치지 않고 자연 하나하나를 섬기기까지 했다. 평화로운 삶을 회구하는 저들은 인간관계 감정을 승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늘과 사람의 관계는 물론 이승과 저승 사람과 귀신과의 관계도 공존 내지는 서로 상대방의 위치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참 평화가 온다고 믿었다.

풍수설의 한국적 수용은 철저하여 산 사람과 죽은 자, 혹은 자연과 사람이 같은 기를 마시며 같은 조건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평화적인 사상을 제도로, 생활로 드러낸 것이다. 끝으로 우리 민족이 한번도 자기 국경을 넘어 남의 나라를 침범한 역사가 없다는 것은 제국주의나 군국주의에서 보면 일면 창피한 사실이나 제국주의나 군국주의의 죄를 직시하고 평화적 공존만이 인간의 살 길이라는 것을 인식한 오늘의 눈에서 보면 한국이 얼마나 평화적인 민족이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무(武)를 숭상한 일이 없다. 선비 사(士)자를 일본도 한국도 공용으로 쓰고 있으나 일본은 이 말을 곧 무사와 연결시키는데 대해 우리는 문사를, 즉 선비를 연계시킨다. 일본인의 상징이 칼이라면 우리 민족의 상징은 붓이었다.

홍익, 대동, 태평 등이 근대 이후 우리 민족의 목표였고 너는 내가 아니고 내 아닌 것은 원수라고 분열, 분리를 앞세우고 마침내 철저한 이기주의에 떨어진 서구인들이 주도한 서구문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일본은 무력으로 계속 우리를 쳐들어 올 때 우리는 갓 쓰고 붓을 든 선비들이 일본으로 계속 파견되었다.

III.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결론으로 우리 현장에서 평화란 어떤 상태인가를 다시 물어보며 결론을 유도하려고 한다. 서구에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밖에 없다는 입장이 강세를 보여 2차 대전이후 긴 냉전체제를 산출했다. 이 냉전체제가 이 땅위의 인간관계를 사실상 둘로 쪼개고 서로 반목질시할 뿐 아니라 상대방을 원수로 간주하는 것이 곧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이라는 논리가 정당화 되었다. 이 냉전체제에서 가장 피해를 받은 것이 우리 민족이다. 38선은 이 냉전체제가 그어 놓은 칼자국이다. 평화는 힘의 균형만 이루면 된다는 사고는 군국주의적인 힘의 논리이다. 그리고 그것이 설정한 평화는 결국 전쟁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가. 전쟁만 없으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쟁은 무기로써 힘을 겨루는 것인데 대해 지금은 무기대신 경제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경쟁의 각축장으로 삼고 있다. 고도의 기계 문명의 성장을 구가하는 오늘에 사는 인간이 평화한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전선에서 적에 맞서 싸우는 한계적인 전쟁이었으나 지금은 전선이 따로 없다. 이 경제적 싸움은 언제든지 무기로 전환할 내면성을 갖고 있다.

근본적인 평화의 성립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사물과의 대립구조를 극복하고 상부 상조함으로만 살수 있다는 인식과 그에 걸맞는 체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너를 치고 내가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너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올바른 인식으로 도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영향을 받아옴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도 배웠고 분석과 비판도 배워 왔다. 특히 그들의 물질문명에서 결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문명이 편리라는 이름의 열차에 우리를 실은채 달리다가 이제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실은 그 열차 자체가 궤도에서 벗어나 깊은 심연으로 추락될 위험성을 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서구문명에서 혜택을 봄과 더불어 인간 자체가 소외되고 인간관계가 이기심으로 모래를 담은 자루같이 응결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 물질을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이용하는 상태가 아니고 날이 갈수록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서구에서 몰려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침투되어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동체적 삶이 크게 위협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전통의 붕괴가 급속히 진

행되는 상태에 있다. 이기주의는 집단적으로는 남을 종속적 관계에 몰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힘(경제적 힘도 포함)으로 상대방을 침략해서 굴복시킨다. 세계평화를 위해 민족자결을 내 세우고 그 바탕에서 세계협조체제구축을 주장했던 닐슨과 그 아메리카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상은 좋으나 자국내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미국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열과 지배라는 전략을 금과옥조같이 사용한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세계개방이라는 구호로 제3세계의 무장해제를 기도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명달아 국제화에서 진일보하여 세계화라는 모호한 말로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국내 정치는 세계화는 고사하고 개방할 마음도 없다. 아직 안기부를 내세워 비밀정치를 하고 정보를 독점하고 대통령은 모든 중대한 결정을 자기 진영과의 의논도 없이 밀실에서 해 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권위주의 탄생이라고 한다. 언론의 탄압은 계속된다. 무슨 외적 증거를 필요로 하라. 신문들의 흐름을 보면 안다. 비판정신을 면도칼처럼 내 세워야 할 신문들도 언젠지 모르게 숨 방망이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의 천하인양 그의 눈치만을 보는 민족국가로 비친다. 그러나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저들은 신문논조에 따르지 않는다. 저들은 저항한다. 그러나 그 힘은 응집할 지도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민족은 그 어느때보다도 분열됐다. 미래를 담은 자루와 같다.

나는 위에서 우리의 소질과 능력이 「조화」라는데 있다고 했다. 그리고 홍익대동·태평등의 구호에 우리의 자세가 반영되어 있다고 했으며 그것은 평화의 추구하는 큰 비전과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주체의식이 없거나 희미해지면 그저 세계물결에 흘러가 버릴수 있다는 것이다. 즉, 되어지는 대로 자기 운명을 내 맡길수 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무책임한 민족이 될 수 있다. 태평이란 세계평화를 지향할 때는 굉장한 이상이다. 그러나 주체적 의욕이 빠지면 우리말에서도 나타나듯 '세상이 어찌 됐든 태평이다'라는 태평이 될 수 있다.

이런 마당에서 전쟁만 없으면 평화롭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구한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열차를 정지시킬 능력은 적어도 이원론에 바탕을 둔 서구적 문명도상에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동안은 인간의 기술발달로 새로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서 지쳐 버리고 마침내 눈을 동양

에로 향하게 되었다. 동양적인 사고에서 지금의 힘의 경쟁시대는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를 찾아 보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시대라는 이름으로 성격화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대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면 서구적 물질문명의 연장이 되고 말 수 있다. 동아시아의 문제는 동아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동아시아인의 뿌리에서 출발될 때만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평화의 과제는 어떻게 서구적 냉전체제에 의해서 분단된 우리의 통일을 대결이나 힘의 논리에 의한 정복이나 균형등으로 해결하지 않고 너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존의 인식으로 이룰수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고 그 영역을 인정할 때 만 가능하다.

나는 여기서 간디(Gandhi)를 기억한다. 간디는 힌두교에 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생을 결단하게 된 것은 「서양종교」라는 낙인이 찍힌 그리스도교 경전에서 받은 영향이다. 그는 톨스토이에 심취했는데 그에게서 신약성서의 보고(寶庫) 같은 산상설교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산상수훈에서 참 평화의 길을 찾았는데 막연한 평화가 아니라 인도를 강점하고 착취하는 영국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됐다. 그것은 바로 「비폭력적 저항」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자기 모순을 지닌 교훈을 주체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한 마디로 이렇다. 「나는 영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인도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영국은 제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그래야 둘 다 영예롭게 살아남을수 있다」 그러므로 그 운동은 비폭력적 저항일수 밖에 없다.

산상설교에 '원수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걸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 주어라'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평화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얻어 맞어라, 끌려가라, 강탈당해라' 라는 말과는 다르다. 만일 그런것이라면 이것은 비겁, 비굴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 대라고 한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고 제안하라고 한다. 맞고, 끌려가는 것은 값을지 몰라도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겁이 아니다. 약자의 윤리가 아니라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자기 결단, 그리고 용기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맞으며, 오리도 끌려가고, 십리도

끌려가며,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깡그리 뺏길뿐 주체적으로 결단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서양사람들은 이런 예수의 말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거부하고 남에게만 강요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주체적으로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면 때리는 자와 맞는자를 영원한 적으로 만들지 않고 둘을 용광로에 집어 넣어서 제3의 길, 즉 우리를 만드는 조화의 길, 대동의 길, 홍익의 길, 그러므로 평화의 길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공자를 주체적으로 배웠다면 공자가 만일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땅을 쳐들어 온다면 공자를 숭상하니까 무조건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이 아니라 마주나가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의 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도를 위해서도 이런것은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라며 정중히 맞서다가 그래도 뜻을 이루지 못하면 공자의 도를 위해, 우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워서 격퇴하는 것이 그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인 것이다.

간디는 우리가 세계를 포용하면서도 주체적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일 수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에 위치한다. 세계의 무게가 동아시아로 기울어지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문제는 동아시아인이 해결해야 한다. 여기 한국인이 세계평화를 위해 주동적 역할을 할 기회가 열렸다.

박영숙 소장님

'지속가능한 개발'은 가능하지 않다

張 元(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우리는 우리가 마치 지구의 마지막 세대인 것 처럼 합부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 그 자체에 트를 다는 사람은 없다. 눈앞에 닥친 21세기의 100년은 온갖 경제지표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의 환경파괴가 지속된다면, 우리 인류 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물종의 역사에 있어서도 최대의 위기가 될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인류가 이루어낸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은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 178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합의하여 채택한 '의제21' 일 것이다. 지구환경정상회담 사무국장 모리스 스트롱에 의하면 의제 21은 인류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전 세계가 한마음되어 환경을 살리기로 동의한 최초의 실천적 행동강령이다.

바로 이 '의제21'의 중심 개념이자 주된 원칙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이며,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성장의 여부가 달려있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기본틀을 깨뜨리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어쨌든 '의제21'은 소위 '지속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21세기 지구의 청사진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지구적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현재로서는 우리 인류의 유일한 대안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의제21'과 그 중심개념인 '지속가능한 개발'은 대전환의 기로에 놓인 지구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의제 21'은 지구환경을 살리는 확실하고도 영구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 '의제21'의 중심 개념인 '지속가능한 개발'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이루면서 환경보전도 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지속가능한 개발'이 '지속적인 무한 성장 (Sustainable Unlimited Growth)'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개발(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SED)'을 뜻한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기존의 '개발'과 '성장'정책의 급격한 조급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첨단 과학기술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환경경제학자 데일리는 지구상 환경오염과 생태적 손실의 단지 가속화만 멈추게 하기 위해서도, 환경기술이 향후 40년 동안 현재의 20배 정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추정은 선진공업국의 1인당 소비증가가 즉시 멈추고 같은 기간동안 지구 인구가 두배이상 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향후 40년 동안 20배의 발전이란 무엇보다 열역학 법칙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과학기술적,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관념에서의 문제점들은 차차한다 할 지라도, '외제 21'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념 그자체에 이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정의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그 어느구석에도 자연과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연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인간 위주로, 인간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복지를 위하여 자연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 세대이든 현재 세대이든 인류가 그들의 필요와 욕망 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과 환경은 잘 보전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내간의 연속성과 형평이라는 개념을 제외하고는, 나귀알뿔이 연젤과 그레델을 맛있게 잡아먹기위해 '육체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키우는 것 (Psysically Sound and Sustainable Diet : PSSD) 와 그개념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이 자연 또는 환경을 마녀의 입장에서 소나 돼지처럼 사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연은 단지 인간의 필요와 욕망 충족을 위해서 '지속가능'해 주면 바람직한 것이고, 게다가 보고 즐기기에 좋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경제적, 심미적 착취의 원천일 다름일 것이다.

사실 다지고 보면 작금의 환경위기를 포함한 인류의 위기는 이러한 착취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 선진공업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착취, 신성(神性)의 인성(人性)에 대한 착취, 남성의 여성성(女性性)에 대한 착취,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착취'의 와중에서도 가치중립을 일관되게 고집해 온 제학문은 점차 왜곡되기 시작하였으며 오히려 착취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일조를 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를 질서정연한 이론으로 뒷받침한 것이 경제학이고, 그 착취 방법을 실제로 개발한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이며, 착취를 가치적으로 정당화한 것이 초기 기독교회의 자연에 대한 성서적 이해이며 그 연장선 상에 근대의 기계론적, 환원론적 사고가 존재하며, 그러한 가치를 사회화 하여 소비를 지선(至善)으로 만든것이 자본주의라면, 그리고 이제 자연착취의 현대판 면피부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비명아래 자연에의 '지속가능한 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는 '외제21'이라면 이는 너무 단시적(單視的)판단일가?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다. 첫번째의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이 두가지 목표의 동시 성취를 위해 '의제 21'은 경제적 수단 및 시장기구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적 유인, 오염자 부담, 환경의 가격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정전과 미야모토등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경제적 접근 방법은 일부 단기적, 미시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 거시적,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창하고 있는 '의제 21'의 실현을 위한 재정부담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선진공업국들은 GNP의 0.7%를 매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기금으로 낼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의제21'프로그램을 수행하기위한 비용은 2000년까지 매년 최소한 6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과연 선진공업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어느 나라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한결같은 기부(Economically Sufficient and Sustained Donation:ESSD)'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인구증가의 문제이다. 지구 인구는 현재 시점으로 55억을 돌파하였으며 유엔인구기금의 추정에 의하면 서기 2050년에 100억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다음 세기 중반에는 지금 지구상 인구의 두배나 되는 사람들이 이 유한한 지구에서 북닥거리며 사게 되어 있는 것이다. 1995년 현재로서도 지구상 인구는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적 인구규모를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넷째, 과다소비와 불평등 분배의 관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은 불가능하다. 과다소비로 인한 자원의 '지속가능성'도 벅찬 문제지만 자원의 소비로 말미암은 환경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구의 환경은 G-7 국가들의 소비자처럼 살아가는 10억에 달하는 인구를 지탱하기에도 벅차다. 하물며 다음 세기 중반에, 지금의 곱절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1인당 소비량 그리고 두배의 인구증가로 말미암은, 총합 네배에 이르는 소비를 지탱하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거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에서 벗어나자 곧 다국적 기업에 의한 새로운 경제지배와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과다하게 소모시키고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파괴시켰다. 또한 G-7국가들이 세계인구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전체 소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소비량으로 보아 부유한 소위 북국의 한사람이 가난한 남쪽나라의 열여섯사람에 해당하는, 현재의 이런 극심한 불평등 소비와 분배구조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일부 선진공업국들만의 얘기일 뿐이다.

인류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연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자연도 인간과 꼭 같이 살고자 하는 승업한 의지를 가진, 스스로 짜지어 가는 능력을 가진 영적존재라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또한 이하늘 아래 횡행하는 모든 착취구조가 타파되어야 한다. 많은 유형의 착취구조 중에서도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 선진공업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착취, 남성의 여성성에 대한 착취는 오늘날 이 환경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제 모든 것은 거듭나야 한다. 성경은 새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종교는 적어도 교리상으로는 초기의 일부 잘못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학문에서도 신과학 운동을 비롯한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오히려 인성을 말살하고 착취구조를 심화하는 왜곡의 기세가 더 두드러진다.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더하고 있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많은 분야에 순환성, 관계성, 공생성, 다양성 등 생태계의 중요한 몇가지 특장(特長)이 녹아 들어가 재정립 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학이 다시 쓰여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은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굳게 신봉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시장기구의 힘이 실로 막강하다고 믿고 있다. 외부효과의 내부화와 같은 기존 시장기구의 맹점 보완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 수천만 종의 생물중에서 오직 한 종에 불과한 인간의 욕망 만족과 면리를 위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그리고 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대량폐기를 당연시 하여, 지구생명체계의 근본적 질서인 순환과 엔트로피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향으로 발달해 온 여태껏의 경제학은 다시 서지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이 진정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 경제학은 다시 깊이깊이 생각해야 한다.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악순환, 제량화 할 수 없는 가치의 계량화, 그리고 학문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가치중립 동으로 특징지워 질 수 있는 경제학은 이제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구의 근본 질서를 해하지 않는, 비가치중립적 생명의 사회과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의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을 포괄하면서도 초월하는 전일적(全一的)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앙집중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민초들이 스스로 짜지어 갈 수 있는 독자적 분산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하다. 착취구조를 뒷받침하는 데서 평등구조를 선택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소수에 의한 소품종 대량생산 일변도에서 다수의 참여에 의한 환경우호적 다품종 소량생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일찌기 우리 조상들이 실천하고 간디, 슈마허 등이 주장한 '근점절약'과,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추구의 '내발적(內發的) 발전'으로 그 방향을 잡아야 한다.

여성학자이며 미래학자이고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헨더슨의 견해이자 나의 견해로는 기존의 경제학자나 성장론자가 더 이상 이 세상과 우리의 거시적 정책을 자기구하기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먼저 생태학, 사회학, 인류학 등 인류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은 학문과 아울러 카오스 이론을 포함한 신과학적 사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거시정책을 다루는 경제학자나 성장론자, 정책입안론자들은 의사나 변호사처럼 일정한 자격 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확실한 자격과 책임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돌팔이 의사처럼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문제가 보궐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지 이미 한세대가 지났고,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제창된 이후 8년이 지났으며, 리우회의에서 그 실천지침이 나온지 만 3년이 되었지만 해결된 환경문제는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적,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지구를 구할 유일한 대안 프로그램이라는 '의제21'은 바로 이런 구태의연한 접근방법들을 고스란히 안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외치고 있다. 결국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화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제21'의 각종제안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분명 이전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이나 결코 등일단(登一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야말로 복잡한 국제 정치사회 역학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가능성은 이제 날로 회박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간 협조체제를 원할히 하기위해 만들어진 유엔지속가능위원회(NCSD)로 그 중요도에 비추어 제역할을 시원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실현 불가능하고 잘못 정의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제21'이 유일한 범지구적 대안으로 굳어지기 전에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인류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21세기 후반에 인류는 다시금 '의제22'를 들고 나올 것인가? 그것은 그야말로 '내일이면 늦으리'이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대부분의 해법이 느슨하고 타협적이며 근본적이지 못한 것은 지구멸망을 사실은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구멸망을 명백하게 전제하고 그 확실한 해결을 위해 역순으로 '카운트 다운'해야 한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브룬트란트'의 한없이 애매하고 불투명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에서 대다수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정책입안자나 경제전문가들은 지구환경의 결정적 파괴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경제성장론자들은 지구환경이 이미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간파하고 감히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담보로 제 살 깎아먹기 식 '개발'과 '성장'을 고집하는 도박을 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로는 의심할 것 없이 인류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만

를 '진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적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지구상 폐기물 축적의 적도인 엔트로피 증가 속도도 빠르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지속적인 환경보전의 양립은 열역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에 우리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야 할 하나뿐인 지구공동체라는 차원에서 모든 착취구조의 타파, 분배정의와 참노동의 실현, 사회적 산소요구량(Social Oxygen Demand ; SOD)의 저감, 생태적 지역문화의 창달, 그리고 아메니티(Amenity)의 제고로 이른바 내발적 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곧 녹색의 생명대안 문화로서 '그린르네상스(Green Renaissance)'이다. 물론 자본주의의 뿌리가 이제 온 세계로 퍼져 날로 무성해 지고 있고 다국적 기업이 극성을 떨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제안들은 일소에 부쳐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환경파괴의 벡터 값에 비해 녹색의 대안문화적 벡터 값은 너무나 작다는 것을 우리 인류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가 한시대의 마지막에 서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새로운 시대의 처음에 와있다. 우리의 앞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으나 기존의 사회경제적 기구와 현대의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한 시대의 결정적 갈림길에서 더 이상 헤매서는 안된다. 오늘날 더 이상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성장할 수 없는, 단지 진화하기만 하는 유한한 지구에서, 우리 인류의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윤리는 당연히 양적 성장의 한계를 내발적으로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행복을 동시에 조화하는 일일 것이다.

** Concepter Paper

환경과 인간

張 元 (배달복색연합, 대전대)

I. 序

오늘날 현대문명의 위기는 환경오염 문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가장 위협한 독은 스스로에서 나오는 분비물, 즉 자독(自毒)이라고 한다. 인간의 자기분비물은 바로 환경오염물질이며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한 인간은 자멸할 수 밖에 없다. 현대문명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환경오염 문제가 전쟁, 질병, 기아 등의 당면 문제들을 제치고 인류생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부상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6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환경오염'이란 말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환경오염이 인류의 장미빛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인식이 계고되기 시작하였다.

범세계적으로 오존층 파괴, 산성비, 온실효과, 해양오염, 열대우림의 감소와 사막화 등이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쓰레기 배출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지구과학자들은 제7권역인 지능권의 영향으로 수권, 대기권, 빙권, 생물권이 현재 격렬한 변화의 고비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격렬한 변화를 우리 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들은 현재 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구 시스템이 과거에도 큰 충격을 잘 견디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기이한 변화 중의 어떤 것들은 관측 장비들이 대단히 미세한 것까지 포착해냄으로써 때로는 과장되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앞으로 다가올 100년 동안 거친 풍랑을 마주할 것이 분명하다. 환경에 대한 위기 상황은 더욱 더 급박해질 것이다. 다음 세기에 닥칠 최악의 폭풍우는 우리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며, 그 재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행운이 필요할 따름이다. 가장 비관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종의 역사에 있어서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의 100년은 생명이 탄생한 이후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그 속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인들은 아직도 진보예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으며 일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위기의 상황에 직접 대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데 있다. 아직 대부분 나라의 정책 입안자나 환경전문가들까지도 지구환경의 결정적 파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인류는 비로소 지구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다. 8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CFC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한 데 이어 94년 3월 21일부터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이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몬트리올의정서는 CFC 사용량을 현수준으로 동결하고 95년까지는 50%, 2000년까지는 전량을 생산중단하는 것으로 돼있다.

기후변화협약은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기후변화 방지협약인 셈이다. 이 협약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가 88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1백57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실시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이 협약의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도국은 발효 후 3년 안에, 선진국은 6개월 안에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성장론자들은 지구환경파괴라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인류의 생존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환경이 오염에 대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이들은 시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논의의 기초는 지구환경은 명백히 파괴된다는 데에 두어져야 하며 지구를 환경파괴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야흐로 환경오염에 의해 전인류가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의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되었다. 이제 환경오염 문제는 오늘날 이 환경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절실하게 생각하고 보다 깊이 있게 거론해야 할 것임에 분명하다.

II 本

이러한 환경의 파괴는 크게 볼 때 현대사회의 지나친 소비와 인구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산업국가에 있어 소비는 이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소비사회는 자원의 남용을 부추기고 그것은 곧 삼림, 토양, 물, 공기의 오염과 직결된다.

그렇다고 과소비에 상반되는 빈곤이 환경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물론 없다. 빈곤은 항구적으로 인간에게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자연환경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땅을 잃은 농민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열대우림 속에서 화전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으며, 굶주린 아프리카 유목민들은 그들의 숲을 손상되기 쉬운 방목지로 만들어 차츰 사막으로 변하게 하고 있다.

환경파괴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하거나 너무 적게 가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면, "얼마만큼 가져야 충분한가" 라는 의문이 남게 된다. 지구는 어느 정도의 소비수준을 지탱해 낼 수 있을까? 언제쯤에야 사람들은 만족을 위해 더 많이 갖기를 그칠 수 있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자연환경을 손상시킬 없이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지금과 같은 소비생활 수준 이하이긴 하지만 빈곤하지 않은, 어떤 충분한 수준의 생활방식은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만족스런 해답을 제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비지향적 생활양식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옹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같은 생활양식이 확산되는 것은

환경의 파괴를 가속시킬 뿐이다.

지구환경은 미국 소비자처럼 살아가는 11억명에 달하는 인구를 지탱할 수 없을 뿐더러, 하물며 현재의 55억 인구나 최소한 80억에 이를 미래의 인구가 우리와 같은 생활양식을 즐긴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소비사회의 소비수준을 낮추고 나머지 계층의 물질에 대한 갈망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인 제안은 아니다.

소비사회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고 있는 지구생태계가 미래세대를 위해 존속할 수 있으려면 **현재의 소비사회는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제품들을 고품질 또는 내구성으로 전환하여 자원의 투입량을 줄이고, 부분적으로는 **여가와 인간 관계** 그리고 기타 비물질적인 수단을 통해 만족을 얻음으로써 소비에 대한 욕구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의 발전과 제도의 개선, 산업구조의 재편성, 새로운 환경조약, 환경세, 풀뿌리 시민운동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인구 증가 또한 지나친 소비와 더불어 지구환경파괴의 양대 축이라 할 만하다.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로 기념되고 있다. 1987년 6월 5일은 유엔에 의하여 세계 인구가 50억에 달한 것을 상징하는 순간으로 선택되었다. 1960년 경에는 인구가 30억으로 되었으며 1974년 경에는 40억으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인도와 중국의 수정된 출산율에 기초를 둔 최근의 추산에 따르면 60억 수준은 이전의 예상보다 1년 더 빠른 1998년까지 도달할 것이라 한다. 인구증가 폭선은 다음 세기 중반에 이르러 그 기세가 줄어들 것이나 인구는 약 100년 후 안정이 성취되기 전에 1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일인당 자원 소비량도 급증하였지만 인구 그 자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지구 자원의 총량적 소모와 그로 말미암은 폐기물의 증대 또한 엄청나다. 이미 지구의 인구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적 인구 규모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각한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수준, 인구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세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조화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환경경제학자 데일리(Herman Daly)는 단지 지구환경 오염과 생태학적 손실의 가속화를 멈추게 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기술의 환경개선 능력이 향후 40년 동안 현재의 20배 정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추정은 산업국가의 1인당 자원소비의 증가가 즉시 멈추고, 같은 기간 동안 세계인구가 두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서 얻어진 것이다. 즉 소비수준과 인구증가가 억제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추정인 것이다.

농업과 교통, 도시계획, 에너지 및 그 밖의 부문에 있어서 기술과 수단의 변화가 현재의 시스템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20배의 발전이란 무리다. 일정량의 연료로 세배나 네배 정도 더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현실성이 있지만, 20배나 더 가는 자동차는 열역학법칙상 불가능하다. 여행으로 인한 환경비용을 그만큼, 즉 20분의 1정도로 줄일 수 있는 교통수단은 사실 자전거와 버스 그리고 철도 뿐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가치기준을 변화시켜야 한다. 기술의 변화와 인구의 안정화는 물질적 욕구의 감소 없이는 지구를 구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인구의 안정화를 향한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에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인류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비물질적인 목

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욕구는 생물권을 황폐시키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물권을 위협하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공생하게 하려면 기술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주요 소비 사회 국가에서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중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택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칠 보다 적절함을 받아들이는 드한 생태적 가정, 기업, 정부로의 회귀가 대단히 중요하다. 가족과 공동체, 만족스런 노동, 양질의 삶의 새로운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

III. 結

과학기술의 힘으로 지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주요 기술개발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 고정시키는 기술 ▲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연에너지의 이용기술 ▲ 핵융합발전 기술 ▲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의해 식량을 양산하는 기술 등이 꼽힌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인류의 지구 노력과 기술개발의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각종 환경규제책이 선진국과 후진국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가 현대문명사회가 대량소비의 생활패턴을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획기적인 기술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는 시간벌기에 불과할 뿐이며, 언젠가 닥쳐올 지구의 최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하여 결국 전 세계인은 환경생태적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생태적 삶이란 한마디로 생태계로 부터 이탈(逸脫)된 인간의 삶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엔트로피의 증가 속도를 줄이고 소모형 체계보다는 순환형 체계를 선호하는 삶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원을 절약하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되살려 사는 삶이다.

* 참고문헌 : 소비사회의 극복, 구자건 역, 따님

지구의 마지막 선택, 김영일 역, 동아

100년 후 그리고 인간의 선택, 이용수, 홍옥희 역, 김영사

지구환경과 세계경제 I, 월드워치연구소

요동하는 지구, 다가오는 대재앙, 신동아 4월호

1등 2등
모든 사람에게 평등이 중요하다

**몇가지 토론 주제.

2025 - 5 1/2%
2050 - 10 1/2%

강령의 제정 목적을 밝히는 서문

development of 741TH

ESSD가 환경문제 해결의 중심개념이 될 수 있나?

수행하여서의 공로가 크니

동양철학이 환경문제 해결의 사상적 씨앗이 될 수 있나?

수업시간 -

한국은 어떤 환경정책 기조 유지해야 하나?

소련을 추종하는 사람들
새해의 - 유년 (종양)

21세기의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이란? *공공성, 경쟁성, 개방성, 다양성*

총체적 접근은 어떤 식으로? (Holistic, Ecological, New Scientific View)

분화운동으로서의 녹색대안운동?

첨단과학기술이 환경문제 해결할 수 있나?

$$\frac{\Sigma g}{\Sigma co}$$

두대기출애니곳 3:1로 일로나

의식3234

$$\frac{1}{7} \times 2 \text{ 기증}$$

찰스노튼을 기증

제2장 1 차 1 차

511621 - 73311

공자행복

3월 21일 수요일 - 3월 27일 일요일
 11월 21일 수요일 - 11월 27일 일요일
 12월 21일 수요일 - 12월 27일 일요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UN의 동향과 민간단체의 역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이 진 아

목 차

들어가는 말

1. 지구적 시민운동의 대두 - '민간단체'(NGO) 현상
 - 1) 후기 산업사회 시민운동의 대두
 - 2) 선진국과 개도국에 있어서 시민운동의 위상
 - 3) 공평성과 지속가능성에의 도전 - 시민운동의 한계와 가능성
2. UN 체계, 브레튼 우즈 체계, 그리고 민간단체
 - 1) UN의 구조, 변화 동향 및 한계
 - 2) UN 체계와 민간단체 활동
 - 3) 브레튼 우즈 체계와 민간단체 활동
3.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UN의 동향과 민간단체의 역할
 - 1) 리우 회의를 전후한 과정에서의 민간단체 활동
 - 2) 의제 21, UN 지속가능위원회와 관련된 민간단체 활동
4. UN 관련 한국 민간단체 활동의 평가 및 제언
 - 1) UN을 중심으로, 환경과 관련된 한국의 민간단체 활동 현황
 - 2) 세계와 같이 가는 한국의 민간단체 활동을 위해

들어가는 말

이 심포지움의 주제가 '의제 21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인만큼, 이에 관련해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발제는 각국 민간단체가 UN 체계를 중심으로 의제 21 수행을 통한 지속가능성 성취를 위해 하는 활동의 소개, 그리고 우리 나라 민간단체의 UN 관련 활동에 대한 제언을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고는 그보다 포괄적으로 범위를 잡아 민간단체라는 후기 산업사회적인 현상의 의미가 무엇이며, 민간단체가 유엔과 어떤 관계 속에서 활동해오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특히 의제 21 수행과정의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환경과 관련된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우리 나라의 민간단체는 이제까지 이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세부적인 사항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담을 안고서도 이렇게 보다 포괄적인 범위를 잡은 것은, 민간단체 활동의 의미를 역사적인 배경에서 파악하고, 특히 지구적 수준의 민간단체 활동이 국가, 혹은 지방수준에서의 활동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UN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것이 왜 우리 나라의 민간단체가 UN을 중심으로 한 지구적 차원의 시민운동 연대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명확히 하고, 어떤 방식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지구적 시민운동의 대두 - '민간단체'(NGO) 현상

1) 후기 산업사회의 시민운동의 대두

인간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간의 상태를 염려하여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인류사회에 있어서 오래된 사회적 동기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박애주의와 자발적 공공선의 실현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그 공간적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 사회에까지 들어가는 것, 즉 현재의 민간단체 사회의 용어를 빌자면 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맺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선진국의 선교 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민간교류는 주로 종교 집단 등 중앙중심적인 거대조직의 계획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분산적이며 사안별 결합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 의미의 민간단체 연대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현대적 의미의, 즉 후기 산업사회적인 민간단체의 지구적 연대가 본격화된 것은 약 20년 전, 즉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있어서 공산주의 정권 및 억압적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북(선진국)에서는 복지사회가, 남(개도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개발이 위기를 맞은 후, 정치적 환경이 더욱 개방되고 다양화되는 것과 시기를 같이한다. 경제적으로는 남에서는 1944년 설립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개발계획이 생태·사회·경제적으로 더욱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는 자각이 높아지면서, 북에서는 기술의 진전 등으로 인한 실업문제가 고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줄어들어가는 생태학적 역량을 놓고 더욱 경쟁수준이 치열해지면서, 이제까지 인간이 지녀왔던 경제활동 방식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반성이 확산되는 시기이다.

산업혁명기에서 2차 세계 대전 후 얼마 동안 인간의 생산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인류는 미증유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고 그 잉여 속에서 복지국가라는 거대조직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냉전체제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금 조달을 위해 정경유착이 더욱 공고해져왔다. 그 과정 속에서 자본은 늘어가는 영향력을 기반으로 끊임 없이 정부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자신들의 규모를 늘이는 방식으로 노력해왔으며,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선진국일수록 그 과정이 진전되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왔다. 특히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제3세계의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기업으로 도약한 초국가 기업의 영향력은 이제 프랑켄슈타인처럼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정도로 확대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정부는 관료주의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비판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고, 또한 거대조직을 유지할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져 축소지향형으로 가고 있다.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사회적으로는 두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자본의 독재와 시민운동의 대두가 그것이다.

자본은 전취적인 투자 정신과 개척 정신으로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력 속에서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쟁주의와 단기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어떤 파괴적인 행동도 불사하는 행동원리로 인해 사회의 불평등, 인간의 불건강,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자본과 기술은 거리를 단축시키고 국경을 무너뜨려 국가내의 시장을 단일한 지구 시장으로 통합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윤의 논리와 기술적 경쟁의 당위성에 밀려 더욱 기술은 고도화되고,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며, 거기에 못미치는 사람들은 탈락되어 인류의 생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라서 소비할 수 있는 소득도 갖지 못한 채 생존을 위협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관료주의적 비효율성, 규제·조정 능력의 약화, 자본의 무자비한 효율중심주의, 생태계 파괴가 진전되면서 이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성장해온 것이 시민운동의 출발이다. 자본에 의해 맹목적으로 추진되며, 정부의 관료주의적 경직성이 대응하지 못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생태학적 위기를 현장에서 제일 먼저 파악하고 대응하는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세력, Marc Nerfin의 표현을 빌자면 '왕자도 상인도 아닌 시민' (Neither Prince nor Merchant - Citizen)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힘으로 등장한 것이다.

2) 선진국과 후진국에 있어서 시민운동의 위상

정부를 공적 섹터(public sector), 기업을 민간 섹터(private sector)라고 할 때 시민운동은 제3 섹터(the third sector)라고 불리운다. 시민운동과 정부, 기업간의 관계는 긴장과 상호보완성으로 규정된다. 이 긴장 개념은 과거의 정치 투쟁에서와는 달리 타자의 부정이나 배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상호보완성이라 해서 공동작용이나 협력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 3개의 섹터는 자율적이면서도 상호의존하는 관계이며,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을 취하는 관계이다.

아직도 냉전 시대의 이분법에서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이 관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다. 정부도 민간단체를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거나 상관 없는 일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간주해왔으며, 아직도 특히 후진국일수록 정부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민간단체들도 정부를 적대시하여 무조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수록 성실한 단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민간단체의 궁극적 목표를 정치세력화로 간주하는 듯한 모습들도 눈에 띄인다.

그러나 정부들은 점차 민간단체를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변혁을 수행하는, 즉 대안적인 개발을 성취하는 과정의 동반자로서 간주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단체의 위상이 커져온 과정은 각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 북측과 남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의 시민운동은 투표, 정당활동, 노동조합 활동과 같은 보다 전통적인 정치참여의 현대적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시민들이 깨닫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정치 참여활동 정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보다 수평적이고 유연하며 다국적인 형태의 자구운동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득세하고 정경유착이 팽배한 1970년대 후반, 실업 및 도시 폭력 등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모순이 뚜렷이 드러나면서이다. 선진국의 시민운동은 이미 투표자로서 소비자로서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역량의 기초 위에서 성장한 것이므로 정부가 무시 못할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진국에서 시민운동의 위상이 커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간 민간단체가 잘못된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며, 이제 그 주장이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인정받게 되어서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선진국의 정부와 결합하여 주도하고 다국적 기업을 필두로 한 자본이 수행한 개발계획은 초기에는 장미빛 미래를 약속했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존의 사회관계를 혼란시켜 많은 유민과 빈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를 최초로 감지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었다. 이런 문제제기는 초기에는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전혀 타지역과 연관성이 없이 일어났으나, 곧 이것이 개발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임이 공유되었다. 문화가 비슷하고 영어라는 언어매체를 공유하는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문제제기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개발과정을 도와주고자 현지에 있었던 선진국의 전문가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운동으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초기에는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도국 정부에 의해 억압 받았지만, 개도국의 상황에 동정하며, 또한 개도국의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지구 전체의 위기임을 깨닫게 된 선진국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선진국 정부를 움직여 대안적인 개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자 후진국 정부는 대안적 개발을 이루는 과정의 동반자로서 민간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UN을 중심으로, 혹은 보다 분산적인 구조로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성의 위기 및 사회적 정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개진되게 되고,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인정되게 된 배경에는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처절한 투쟁에서, 박애주의에 기초한 자원봉사 정신의 헌신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지역에서 지구까지 이르는 시민운동의 연대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3) 공평성과 지속가능성에의 도전 - 시민운동의 한계와 가능성

이러한 시민운동의 목표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다. 시민운동이 대응해야 할 후기 산업사회의 주된 모순은 심화되어가는 구조적 빈부격차로 인한 빈곤 문제, 그리고 단기적인 이윤 추구, 혹은 생존을 위해 후세대의 생존기반을 파괴하는 경제의 지속불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주된 견제 대상은 자본이며, 자본과 결탁한 정치의 부패성, 관료주의적 경직성이다.

이런 모순의 규모는 이제 지구적인 것이다. 지구 경제라는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실로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제 지구의 어느 구석도 세계적인 자본의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들이 직면하는 사회의 모순은 아무리 지방적, 국내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만 더 캐고 들어가면 국제협약을 위시한 지구적 규모의 정치 경제의 틀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이라는 면에서 볼 때 지구는 점점 더 뚜렷이 양분되어 간다. 과거의 동서 구분이나 남북 구분보다 더욱 깊고 포괄적인 구분선이, 자유와 품위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과 가장 기초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조차 지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산에서 소외가 된다. 전전일로에 있는 첨단 기술 시장에서 전문성의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도 없으므로 구매력이 없어 소비에서도 소외된다. 자본의 이윤추구 및 경쟁논리가 횡행하는 현대에서 생산은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매력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 행해진다. 이제 더 이상 착취의 대상도 아닌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달는 일이 증가하여 환경난민, 내전, 도시폭력을 유발하며, 부유한 사람들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체로서 문제이고 위험인 것처럼 무관심하거나 두려워 한다.

이런 무관심과 분리감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 선진국에서 시민운동의 가장 난관은 시민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다. 1970년대 제3세계의 상황을 인식한 선진국의 운동가들은 빈곤을 구조화하는 세계 경제의 모순을 호소하여 제3세계 지원운동의 에너지를 모아냈으나, 시간이 지나고 빈부격차 문제가 심화될수록 무관심의 골도 깊어간다. 구조적으로 아프리카에서는 몇개 국가의 전체 인구가 마치 백인에 의해 인디언들이 멸종되듯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들의 생태학적 사회학적 위기에 대해서 세계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것이 선진국내의 실업 심화에 따른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결합하여 편견, 비관론, 인종주의를 부채질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신민족주의적 탄압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후진국의 시민운동은 개발독재와의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획득한 경험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그 성과를 경제사회분야에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만큼 선진국의 운동에 비해서는 정치운동의 색채가 좀 더 남아 있는 편이다. 정치적 열기가 있는 한에 있어서 에너지는 좀 더 지속되겠지만, 정치운동의 문제점은 일단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세력이 되고 나면 시민운동으로서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잃게 되기 쉽고, 자본의 힘이 정치적 그늘에 숨겨진 부패의 고리 속에 함몰되기 쉽다는 것이 후진국 시민운동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후진국 시민사회는 활발한 연대를 통해 문제해결의 힘을 키워가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개발과정에서 선진국의 민간단체가 후진국의 민간단체를 대하는 태도는 시혜자로서의 문화우월주의적인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북쪽 국가들도 부분적으로 구조적 실업, 도시 폭력, 약물중독, 에이즈, 환경악화 등 지구적인 현상에 직면하고 그 부분이 확대됨에 따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는 자로서의 보다 수평적인 국제적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이들은 이제 세계 자본의 횡행 및 정치의 관료주의적 경직성, 한 마디로 산업사회적 개발방식의 모순이라는 공동의 적을 갖게 된 것이다.

선진국에 있어서나 후진국에 있어서나 시민운동의 과제가 점점 커져가는 것은 견제의 대상이 지구적 차원으로 양적 팽창 일로에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지구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여 강조되고 있다. 문제가 지구화되는 것과 똑 같은 과정으로 해결방법도 지구화된다. 지구적인 시장 구조와 행정 구조는 지구적인 시민의 행동을 통해 민주화될 수 있다는 것은 국내 시민운동이 정부와 시장, 사회를 민주화하고자 했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그리고 비록 20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시민운동의 역사는 이 운동이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꾸준히 국내외의 문제제기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정치과정
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처음에는 그 중요성을 외면하던 정부들(public sector)도 지속가능
성의 위기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로서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로서는 증가하는 기업(private sector)로서의 압력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도
민간단체의 존재가 필요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민간단체는 정부, 기업과 함께 후
기산업사회에 있어서 3자 균형의 한 축으로서 인류 전체의 과제인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2. UN 체계, 브레튼 우즈 체계, 그리고 민간단체

선진국과 후진국의 시민운동이 서로 어떻게 교류, 연대하여 지구적 차원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은 유엔이라는 국제 정치기구,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등의 국제 경제기구
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연대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잘 이해할 수 있다.

1) UN의 구조, 변화 동향 및 한계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틀로 만들어진 유엔의 활동은 이
후 국제사회의 문제의 변화 추세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는 정치적으로는
냉전상태이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권 내에서 선진국이 주도하는 개발 열기에 휩싸여왔다. 당시
에는 선진국, 개도국, 공적섹터, 민간섹터 할 것 없이 개발의 장미빛 청사진에 대한 기대에 부풀
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산업사회적 개발방식의 문제점이 가시화됨에 따라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이 문제들을 호도하려는 세력, 즉 세계자본의 움직임과 함께 개발방
식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동을 거는 세력으로서 시민운동이 등장하여 두 힘 사이의 긴
장관계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엔은 국제적인 정치 기구로서 양면성을 띠는 활동을 해왔다. 산업사회적
개발방식의 문제점은 환경문제, 빈곤, 경제적 불평등, 실업, 폭력, 도시문제, 여성문제, 청소년 문
제 등의 다양한 사회적 모순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서로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
응하고 국제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적 규범들을 창출하는 일을 유엔이 주도해왔
으며, 이를 위해 많은 장치들이 새로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문제를 고정·심화시키
는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유엔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며, 오히려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출범 당시 유엔은 세계 평화와 평등, 복지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서의 명분에 걸맞게 총회의
의사결정을 1국 1표제로 하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히 하며, 사회개발과 관련된 국제적 힘
력을 담당하는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제적 봉사정신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유엔 구
조와 나란히 세계의 경제를 운용하며 유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브레튼 우즈 체계는 1달
러 1표제로 부유한 선진국이 실제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과정은 비밀에 불
여진다. 이런 태생적인 구조적 모순은 유엔에게 양면성을 이용하여 자본과 시민운동을 서로 견제
시켜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을 주는 동시에 유엔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로 작
용하기도 한다.

유엔 기구의 통폐합 과정을 개괄해보면 이런 점이 선명하게 눈에 띈다. 냉전 시기에는 안전보
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활동이 중요했으며, 많은 위원회들이 다양한 활동을 분담해왔으나
냉전 종식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은 축소 기미를 보인다. 보다 사회경제적인 이슈를 담당하
는 것은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으로서 이 ECOSOC의 기구 변
화는 국제사회의 기류변화에 재미있는 시사점을 준다.

1992년 현 사무총장인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Ghally)가 취임하면서 경제개

발국을 신설하며 이전의 기구들을 통합하는데, 이때 폐지된 위원회는 대부분 사회개발과 협력에 관한 것들로 경제개발 및 국제협력관 (Office of Director General for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 사회문제국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nd Social Affairs), 기술협력 및 개발국 (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과학기술개발센터 (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velopment), 다국적 기업 센터 (UN Center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s) 등이다. 이중 전4자는 개도국의 개발 지원과 관련된 것이며 마지막 것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맡고 있었다. 통합의 방향이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게 시혜적인 경제개발로부터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냉혹한 경제개발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음은 설명의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어 UNCED 회의 준비 과정에서, 그리고 후속작업으로서 세계의 새로운 유엔 기구가 탄생한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기업 회의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ies)가 그것이다. BCSD는 이전에 규제대상이던 다국적 기업이 주체적으로 회의를 결성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을 논의하는 장치이며,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서 세계자본의 독세를 용변하는 구조이다. CSD는 UNCED의 합의문서인 의제 21의 수행과정을 담당하는 기구, GEF는 이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구로서, 환경문제가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의 유엔은 팽대하는 세계자본의 영향력과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의 영향력을 동시에 수용하는 구조로 되어서 현재까지 끊임 없이 시민운동과 기업의 긴장관계의 무대가 되고 있다. 국가내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유엔은 시민운동보다는 자본과 밀접한 결속력을 보이며, 거의 모든 국제협약이 내용적으로는 대자본의 이익을 두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적 자원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모든 지구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시민운동의 국제 연대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유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명분만이 아니라 실재를 전세계 시민에게 알려 세계적 여론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통해서만이 이들 지구적 정치·경제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유엔 체계와 민간단체의 활동

민간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NGO라는 용어가 많이 통용되고 있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즉 비정부조직이라는 말의 약자인 NGO의 사용은 1948년 UN의 공식 문서에서 비롯된다. 1945년 창설된 유엔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에 의해 창설되는 국제 경제기구를 통하여 후진국의 개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후진국 정부의 부패를 견제하고 개발과정이 민중에게까지 공유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조직을 그 과정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발의 민간 파트너로서 현지 주민 및 중개자인 지식인을 조직하여 기구를 만들고 이들을 통칭하여 NGO라고 부르게 되었다.

유엔은 창립 당시부터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사실상 민간단체의 참여 범위는 유엔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제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에 한한 것이었고, 그 권한도 공식회의에 참관이 허용되는 정도에 머물렀으며, 그 수는 1992년까지만 해도 개발과 환경을 통틀어 928 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의 모순이 가시화되어 지구적인 존속 위기에까지 치달게 됨에 따라 이 문제를 일찍부터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해왔던 민간단체의 중요성이 점차로 실제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민간단체의 위상이 파격적인 격상을 보게 된 것은 19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해서였다. UNCED 사무국은 추가로 1420 단체를 공식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이 회의의 후속작업인 의제 21의 수행을 담당하는 유엔 기구인 유엔 지속가능위원회에서는 출범 첫 해인 1993년 추가로 1000 단체를 유엔이 공식 인정하는 단체로서 의제 21 수행과정의 모니터링에 동참하게 하였다.

양적으로 볼 때도 시민운동의 위상은 1992년을 기하여 급격한 격상을 보았지만, 질적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전에는 유엔이 NGO라는 범주를 인정하여 국제회의에 참가 자격도 주었지만, 이들은 옵지버로서의 자격이 주어졌을 뿐 실제로 정부 대표와 대등하게 포럼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리우 회의 때부터는 정부 대표가 민간단체의 포럼에도 공식적으로 참가할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대표가 정부의 공식회의에서 발언하고, 비공개 실무 모임에도 참여하게끔 된 것이다. 지속가능위원회 총회에서는 더욱 민간단체의 본회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운동의 위치가 사회를 지탱하는 3개 축의 하나로 인정을 받은 역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 시민운동의 국제정치 참여는 시민운동의 본격적인 태동기인 1970년대 후반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다. 그 배경에는 시민운동계의 주장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이용하여 후진국을 설득하려는 선진국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1972년, 지구환경문제가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올랐던 스톡홀름의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의 위기를 생각하여 개발을 자제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에 개도국들은 '만일 공해가 개발의 결과라면 우리는 공해를 원한다'며 반대했었다. 이러한 개도국 정부를 설득시키는 데 개도국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선진국 민간단체 및 이들의 영향을 받아 조직이 강화되어온 개도국 민간단체의 압력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는 유엔 구조와 관련하여 자본의 전횡 및 정부의 부정을 견제하고 선진국·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에서 국제여론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역할 뿐 아니라 실제로 유엔의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보다 시민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대안을 세계의 시민사회에 계몽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역할이 수행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유엔 지속가능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인간정주센터처럼 기구화된 유엔 활동의 총회, 전문가회의 등을 계기로 집약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리우 환경개발회의,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코펜하겐 사회정상회담, 북경 여성대회 등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3항에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3) 브레튼 우즈 체계와 민간단체의 활동

환경과 개발 문제를 주된 분야로 하는 세계의 지명 민간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이들이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개발은행(IBRD), 세계은행(WB),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 등 이른바 브레튼 우즈 체계의 기구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많은 노력을 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평화와 정의를 명분으로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유엔에 비해 이들 브레튼 우즈 기구들은 명분에는 크게 개의치 않으며 막강한 경제력으로 실제로 국제정치를 요리하고 있다.

세계의 시민운동이 이들에 관심이 큰 까닭은 실제로 권한과 자금이 있어 세계의 움직임을 좌우하는데 이 기구들이 1달러 1표주의로 경제력이 큰 선진국이 주도하게 되어 있으며, 의사결정과정 이 전혀 공개되어있지 않은 투명성의 문제가 있고, 최종적 의사결정과정에 누가 참여하였는지 공개되지 않아 책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력이 큰 다국적 기업의 영향이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로 보아서는 가장 출자금을 많이 낸 미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민간단체들은 세계의 경제적·생태학적 파탄을 물고 온 것은 바로 이 기구들이며 이는 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SAPs)이라는 개발계획의 큰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 작업이란 선진국의 기술로 개도국의 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각 사회별로 어느 정도 완결성이 있었던 산업구조를 지구적 차원에서 선진국은 2차 산업, 후진국은 그를 위한 원료 시장으로서 분업화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분업의 효율성이라는 명분과 개도국의 경제도 세계 시장경제에 통합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해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구조조정

정 작업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빈부격차 심화, 선진국의 실업 양산, 개도국의 환경 및 사회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 A라는 개도국이 있다고 하자. 대부분의 개도국이 그렇듯이 A는 비교적 풍부한 생태적 자원 속에서 빈약한 기술에 의존해서나마 지방을 단위로 하는 단순한 경제생활을 영위해왔다. 이런 자금자족의 경제체계에 선진국 B가 들어와 대규모 환금 영농을 할 경우의 이점과 소득증대의 청사진을 들어 농업개혁을 할 것을 설득한다. 경제성장의 약속에 끌린 A는 B가 제안하는대로 저리의 외채를 빌어 우선 대규모 영농을 뒷받침해줄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댐공사부터 시작한다. 댐공사의 수주는 B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맡고, 엄청난 생태계 파괴와 함께 수몰지역 이주민이 발생하며, 이들은 약간의 보상을 받아 도시지역의 임금 노동자가 되어 결국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열대우림을 베어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만들지만, 기후와 토양이 맞지 않아 점점 더 많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지 않으면 농업이 유지되지 않고 토지생산성이 떨어져 간다. 여기에 공급과잉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국제시장에서 농산물과 공산물의 협상가격차로 인해 점점 판매조건이 불리해지고 개도국의 소득은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영농을 위해 도입된 각종 농경기구 부품 및 화학비료 생산을 위한 부대 장치를 위한 기술을 선진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개도국은 수입을 늘릴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에 덧붙여 외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난다. 빚에 물린 개도국은 더욱 자원을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소득을 늘리려 하지만 이자를 갚기에도 어려운 실정에 물리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으로부터 오는 값싼 원료 및 단순공산품의 수입으로 국내 원료시장이 피폐되고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된다.

이 과정은 무엇보다 개도국이 생태적·사회적·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며, 선진국의 중소기업 및 자영농 역시 타격을 입고, 다국적 기업 및 국제 금융기관만이 점점 더 많은 이윤을 쥘 구조를 선명하게 그려내는 한 예에 불과하며, 그 밖에도 보다 선진된 개도국 및 선진국의 후진 지역까지 포함하여 브레튼 우즈 체계의 불공정성이 미치는 피해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 지구상에 한군데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린피스, 제3세계 네트워크 등 비판적인 민간단체들은 '50년이면 충분하다' (50 Years is Enough)라는 슬로건으로, 브레튼 우즈 기구가 행해왔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파괴의 실상을 고발하고 세계시민의 여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 경제기구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브레튼 우즈 기구의 하나인 GEF(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지구환경기금)이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원이 되었다는 것이 UN을 중심으로 한 지구환경 보전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단면이다. GEF는 리우 회의가 끝나면서 새로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는 장치로서 신설되었다. 민간단체는 '새롭고 투명한' 자금원을 요구하였지만, GEF는 새롭기는 해도 투명하지는 않다. 환경파괴의 주범 중의 하나로 민간단체의 비난을 받으며 구조조정 프로그램 주도하는 세계은행이 GEF의 관리를 맡았으며, 그 결재과정은 비공개이다. 이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정경유착에 민간단체는 아직도 열띤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3.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유엔의 동향과 민간단체의 역할

1) 리우 회의를 전후한 과정에서의 민간단체 활동

1992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상회담이었던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여러 측면에 있어서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서 국제사회 문제의 변화를 반영하는 기념비적인 회의였다.

우선 1972년부터 제기된 지구환경문제가 20년의 문제확인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할 필요에서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폭넓은 세계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좁혀진 지구촌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회의 장소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였다는 점이 반영하듯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위기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공유되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어떤 주제도 이만큼이나 모든 국가가 합의하는 기초에서 출발한 적이 없었다. 세번째로는 민간단체 참여의 범위가 파격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198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지구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이래 2년반의 준비과정 및 2주일의 회의 과정에서 민간단체는 정부기구보다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정부도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번째로는 회의 과정에서의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두드러져 본질적으로는 시민운동과 자본의 대립전을 정부가 수행해준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감한 총론도 각론에서는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합의에 이를 수 없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방향 조정은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였다.

환경문제 해결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동의 과제이며, 환경문제의 궁극적 원인제공자인 지속 불가능한 개발 방식을 수호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며, 이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시민운동이고, 정부는 그 대리전을 수행해준다는 후기 산업사회적 갈등구조가 리우 회의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1989년 12월에서 1992년 6월까지 있었던 리우 회의 준비 기간 중 4차의 준비회의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들이 많이 초청되었고, 유엔 본부는 각국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 회의를 둘러싸고 민간단체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무수한 워크숍이 세계 각국에서 열렸다. 2주일간에 걸친 리우 회의 기간에는 본 회의인 정부간 회의와 병행하여 역시 같은 도시에서 전세계 민간단체의 회동인 글로벌 포럼이 열렸다. 글로벌 포럼에서는 민간단체끼리 교류하며 비교적 앞선 민간단체가 새로 출발하는 민간단체를 교육하는 활동과 함께 정부간 회의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의제 21, 기후변화 협약, 산림원칙, 생물다양성 조약 등 리우회의 문건의 조항에 민간단체의 시각을 통합하는 정책추진 활동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던 민간단체에 비해 정부의 시각은 이제까지의 개발 위주의 사고방식의 한계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었으며 거기에 다국적 기업의 압력까지 작용하여, 의제 21에서는 핵, 군사주의, 다국적기업 등 핵심적인 내용이 크게 빠지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의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고 말았다. 민간단체들은 크게 실망하였지만, 지구환경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활방식과 사회질서가 필요하다는 의식은 일단 대단한 진전이며, 의제 21이 그를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2) 의제 21, UN 지속가능위원회와 관련된 민간단체 활동

리우 회의를 끝내면서 각국 대표들은 후속 작업을 위한 유엔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 후 일련의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그 기구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밑에 지속가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결정 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는데 그 이유는 위원회일지라도 유엔 인권위원회처럼 예산이 풍부하여 어느 정도 자체적인 집행력이 있는 게 아니고, 1997년까지만 존재하는 한시적 기구로서 예산도 적고 위상도 낮아 실제로 별로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1993년 5월 창립 총회를 가진 지속가능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각국의 의제 21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활동으로서는 연 1회 총회를 가지며, 총회 소집 6개월 이전에 각국으로부터 의제 21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받는다. 회의 주제는 무역과 환경,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 정책결정과정, 주요 그룹의 역할, 교육, 기술지원, 재정 충원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범분야별 사안(cross-sectoral issue)과 유해 폐기물, 담수, 해양, 삼림 등 분야별 사안(sectoral issue)로 나뉘어져 의제 21이 포괄하는 주제를 4개년도로 나누어 매년 총회에서 각국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국제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한다. 1994년도의 분야별 사안은 보건, 인간정주, 담수, 독성 화학물질, 유해 폐기물이었으며, 1995년도에는 삼림, 토지 이용, 생물다양성 보전, 사막화, 농업, 생명공학 등이었다.

지속가능위원회 사무국은 회의 준비 과정에서 각국의 보고서 작성을 독려하며, 유엔의 관련 민

간단체 활동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민간단체 연락센터 (UN NGO Liaison Service)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것을 미리 신청하여 자격 인정(creditation)을 받은 민간단체에 알려도록 하며, 될 수 있으면 민간단체도 보고서를 내어 상호 점검(cross check)이 되도록 독려한다. 사무국은 또 그 회의의 안건이 되는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의제 21의 각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과 지원 장치까지도 포괄하려 하는 것으로 실무 그룹이 성안한다. 이 문서는 각국 정부에 전달되며, ECONET라는 전자 정보망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삼림문제에 관한 것을 주된 활동 내용으로 하는 단체는 그 국가의 삼림에 관련된 모든 정책에서의 변화를 지켜 보며, 의제 21의 정신인 지속가능성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캠페인을 한다. 이 분야에서 좀 더 앞선 단체가 국내, 혹은 지역내, 혹은 타 지역의 단체들과 대중을 대상으로 삼림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위락시설 개발, 무분별한 벌채, 대규모 댐 건설, 대규모 도로 공사 등 삼림을 훼손하는 개발 방식을 반대한다.

한편 삼림 분야가 회의의 안건으로 채택되는 시기를 대비하여 국가별,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삼림 문제에 대해 민간단체가 파악한 것, 즉 국가 정책상의 변화, 삼림 훼손 실태, 그 배후에 놓인 자본의 움직임, 이것이 초래할 위기에 대한 경고 등에 관해 논의하면서 삼림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입장을 정리한다.

이들 중에서 몇사람은 회의 전에 유엔이 준비하는 준비실무회의 성격의 모임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그 입장이 유엔의 문서에 반영되도록 문건을 인쇄, 배포하여 여론을 형성하며, 회의 기간 중 자국 정부대표들을 설득하고 기자들에게 여론 조성을 부탁하며, 회의 동향을 살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민간단체 대표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시위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상과 같은 움직임 속에서 각 사안별로 각국 및 민간단체의 입장이 반영된 최종 문서가 나온다. 민간단체는 다시 이것을 국내적으로 홍보하고 자국의 정책이 거기 맞는 것이 되도록 하는 정책 촉구 운동을 시작한다.

이같은 과정 속에서 지구환경위기의 절박성에 비하면 너무도 느린 진전이기기는 하지만, 회의를 계기로 국내적인 계몽도 할 수 있고, 비교적 앞선 나라는 자국의 홍보를 위해 지속가능성 성취를 위한 국가 활동을 선전하며, 이것이 또 타국의 민간단체를 자극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정부를 촉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적극적이지 못한 나라에게도 적어도 국제 여론을 의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미진하기는 하나 유엔 지속가능위원회의 역할이 일단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도 볼 수 있다.

4. UN 관련 한국 민간단체 활동의 평가 및 제언

1) UN을 중심으로, 환경과 관련된 한국의 민간단체 활동 현황

환경과 관련된 유엔 활동에 한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참여한 것은 1992년 3월 뉴욕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에서부터이다. 당시 경실련 실무자 2인, 환경운동연합 실무자 1인이 참여해서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를 처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국 사회운동의 역량, 그리고 한국의 대외의존도를 생각할 때 이처럼 해외 활동의 경험이 미숙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언어와 문화 장벽 탓이 크겠지만, 민간단체를 정치적으로 견제해야 할 세력으로 보던 독재정권 시대의 남은 시각 탓도 크게 작용했다. 민간단체의 참여를 독려하라는 유엔의 지시가 있었고 참여 자금까지도 사용가능한 것이 있었는데, 정부는 전혀 이 사실을 민간단체에 알리지 않았었다.

귀국한 참가자들은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이 역사적인 리우 회의에 참가하도록 준비를 서둘러, 3개월 후인 본 회의에는 약 70여명의 한국 운동가들이 참가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과 개발에 대

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참여할 만한 기초 지식이 거의 전무한데다, 참가자의 대부분이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복잡한 대규모 국제회의의 진행과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왕에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 있었고 국제회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극소수의 운동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눈 동냥에 그친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해외에 참여하여 활발하고 전문적인 민간단체의 활동을 본 이들의 경험은 이후 성숙되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한국 환경운동의 해외연대를 추진하게 된 밑거름이 되어왔다. 또한 리우 회의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를 새로이 접한 정부측에서, 특히 당시 환경처에서 민간단체와의 대화 창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을 보였다.

한국 민간단체 중에서도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 비교적 해외 활동의 참여 경험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국제적 환경운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유엔 관련 민간단체 활동의 참여도는 의외로 낮다. 유엔 지속가능위원회가 설립되고 그 활동에 참여할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는 과정은 경실련만이 밟은 것 같다. 그리고 YMCA,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이 세계YMCA, 국제소비자연맹(Consumers International)의 우산 속에 역시 참여 자격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지속가능위원회의 참여도는 1993년 1차 총회 때 경실련의 실무자 3인이 참석하고, 1994년 2차 총회 때 경실련이 조직한 민간단체 해외 연수단이 잠깐 견학을 하고, 소비자시민모임의 실무자 1인이 참석했으며, 1995년 경실련의 실무자 1인, 소비자시민모임의 실무자 1인이 참석한 것이 전부이다.

1차와 2차 총회 이후 경실련은 참석했던 정부 대표단과 전문가를 초대하여 민간단체들 간에 지속가능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주최하였다. 경실련은 아시아 지역의 민간단체 연대들 속에서 지속가능위원회의 사안들을 준비하는 지역 워크샵에도 꾸준히 참가해왔다.

2) 세계와 같이 가는 한국의 민간단체 활동을 위해

한국의 시민운동, 그 중에서도 환경운동의 전개를 보면 세계의 흐름과는 좀 어긋나는 양상이 눈에 띄인다. 우선 시민운동이 전반적으로 정치지향성을 강하게 갖는다. 이것은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으로 독재 정권을 상대로 한 민주화 투쟁의 잔재가 아직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체계 속에 살면서도 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정치세력의 견제 및 정치에 식상한 시민들의 오해를 초래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후기 산업사회 시민운동의 명제에 장애를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환경운동이 마치 독자적인 영역을 가져서 사회의 다른 분야와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듯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개발문제와 연동하여 인식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개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의 환경문제는 아직도 무언가에 저항하는 독자적인 영역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를 환경단체만의 고유한 문제로서 묶어 놓는 경향은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폭 넓은 사회적 논의의 확산을 저해하기 쉽다.

또한 환경문제의 궁극적인 견제 대상은 자본과 같은 경제 세력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단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에 대한 논의를 즐겨 하지 않는다. 가장 선명한 예가 우리 나라의 다른 사회운동 역량에 비해, 그리고 소비시장의 규모에 비해 소비자 운동이 대단히 약하며, 가게와 관련된 여성들 전용의 운동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기 산업사회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경제이며, 정치나 사회운동을 말할 때도 그 배후에 숨은 경제적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허상만을 보게 될 뿐이다.

이같은 어긋남은 지구적 차원의 시민운동이라는 역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국내의 분위기에만 스스로를 한정시켜

서 폐망의 경험을 맞은 사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수히 알고 있으며, 더우기 현대와 같은 지구촌 사회에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국내문제에 대응하기도 바른 민간단체의 역량이지만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유엔과 같이 국제사회의 중심이 되는 기구의 환경관련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은 국내 문제를 보다 폭 넓은 국제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보는 눈을 기르며, 국제사회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하여 민간단체의 시각을 입력할 수 있으며, 문제의 근본을 바로 파악하고 시민운동의 지구적 연대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많은 한국 민간단체들이 지속가능위원회의 활동을 알고 있고 참여하고 싶은 의욕도 높다. 다만 항상 국제화의 걸림돌이 되는 언어장벽 문제와 자금 문제로 인해 의욕만큼의 활동을 못하는 것 같다. 이같은 제약조건 속에서 민간단체로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역시 협동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활동의 효율성을 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민간단체가 했으면 하는 일을 몇가지 정리해본다.

첫째, 지구환경문제와 이를 둘러싼 국제적 동향이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지닌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의 정확하고 간편한 전달이 필요하다. 모든 단체가 여기에 힘을 들일 수는 없으므로, 단체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해외 정보를 입수하고 번역, 가공하여 단체간에 배포하는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국제 회의 참여시에도 참여 방법에 대한 노우하우 및 참여 결과를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의 역량을 지역적 차원에서 국내적 차원으로 뛰어내고, 이어 지구적 차원으로 뛰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연대사업의 의미이며, 이미 많은 환경단체가 연대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폭을 넓혀 환경전문단체 뿐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와의 연대, 특히 국제적인 통로를 갖고 있는 단체와의 연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사안별로는 연대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구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대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제대로 이행되는가를 파악하려면, 정부 대표들의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바 올바른 방향으로의 시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민간단체는 정부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이같은 실무를 뒷받침하고 실무자의 언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 목적을 위하여 항상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민간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설득하여 이러한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틀을 갖추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이와 같이 해외 연대와 관련된 활동을 주로 지원해주는 자금 체계를 따로 갖추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같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연대장치가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면 작은 사무국과 자문위원회를 갖춘 봉사조직으로서의 민간단체 조정 센터(NGO Cordination Center)가 있으면, 민간단체를 위한 국제 정보의 수집, 가공, 전달할 수 있고, 민간단체의 행동조정으로 중복을 회피할 수 있으며,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의 접촉, 유엔과 민간단체의 접촉, 국제적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에 대한 접촉, 언론 매체에 대한 접촉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조직의 구성이 어려우면, 민간단체 포럼과 같은 형식으로 보다 느슨한 형태로서 민간단체의 역량을 조직하는 장치도 좋을 것이다.

정부는 시민운동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있어서 동반자이며, 시민운동의 활기가 올바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 이를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민간단체에게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단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하며, 민간단체의 항구적 연대조직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부 대표단에 전문가 자격으로서 민간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 등등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환경보존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NGO's Rol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of Korea

유재현
정실련(사단법인) 경제정의 연구소장
(사단법인) 환경개발센터 운영위원장

1.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지속가능 사회

(1)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개념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14일부터 2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CSD(지속가능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는 그동안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세계적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문제가 이처럼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이태오르기의 갈등이 종말을 고한 이후 세계경제 질서를 재개편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둘러싼 남북문제가 새로운 이태오르기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핵심은 지구자원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정책과 소비방식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80년에서 1990년까지 10년간 세계의 총생산액은 15조 5천억 달러에서 20조 달러로 증가하고 무역 총액은 매년 3-4%씩 성장하여 1990년에 3조에 달했다. 월드위치 지구환경 보고서의 추산에 의하면 80년대 10년 동안의 경제성장 증가분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 1950년대 까지 수천년 동안의 경제성장의 증가분보다 크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 되면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황폐화되어 결국 50년 후에는 지구 전체가 멸망할 수 밖에 없다. 경제지표가 장미빛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환경은 급속하게 암흑기로 향해 나갈 것이다.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이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을 취해야만 인류 생존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 브런트랜드 수상이 위원장이었던 세계환경 개발 위원회의 공식 보고서인 "우리의 공동미래, Our Common Future"는 우리가 현재와 같이 더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계속하고 개발도상 국가들이 이를 그대로 반복한다면 인류의 장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고 인류공동체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능케하는 유일한 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려면 결과에 대한 대응요법식의 대응보다는 사회 전분야에 걸친 근본적인 대개혁을 전제로 한 경제개발 방식과 삶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은 단지 정부나 기업이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시민들의 폭넓은 인식전화와 연대적 활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바로 이점 때문에 소비자와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 지구환경문제의 등장과 지속가능 사회

Garrett Hardin은 1968년에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지의 자유 사용권을 신봉하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달려가는 길의 끝에는 모두의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하딘의 경고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구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큰 지역 겸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기권과 해양이 바로 국제법상으로 공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나라의 환경오염이 자국의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을 하나의 행위주체로 보면 전 지구가 바로 하나의 공유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주체를 규제하기 위한 약속이 필요하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150여 가지의 환경관련 국제조약과 협상들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자유롭게 공유지를 사용하다가 새로운 약속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수많은 갈등이 표면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을 풀기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갈등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둘째, 각각의 행위주체별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도 바로 이러한 개념적 틀속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그 동안의 경제개발 전략과 소비생활 패턴은 인간위주로 되어 있었다. 인간은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간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면 결국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계를 넘어서서 자연환경의 보존, 그리고 환경이 지속가능한 범위내에서의 개발만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궁극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구자원에서 생각해 보면 한정된 자원이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고 자정능력이 한정된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한정된 토지위에 폐기물만 쌓이게 된다. 결국 자원이 탕진되어서 먼저 망할지, 폐기물 때문에 오염으로 먼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인류가 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물론 모든 지구시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전문성을 가지고 정리하여 환경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조직화된 환경단체만이 할 수 있다. 대체로 정부와 기업은 경제환경성화에 중점을두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만을 줄이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제나 환경단체만이 하는 것이고 그러한 압력이 가중되면 정부와 기업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대책을 세우게 된다.

(3) 한국 민간환경단체의 과제

환경보호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전문분야에 있어서 주요 그룹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UNCED에서 채택된 9개의 그룹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개발을 위한 지구자원의 여성의 활동

-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년
- 3) 토착원주민과 그들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역할의 인정과 강화
- 4) 지속가능한 개발의 동반자로서의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강화
- 5) 의제21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행동
- 6) 노동자와 노동 조합의 역할 강화
- 7) 기업과 산업체의 역할 강화
- 8) 과학 및 기술계의 역할
- 9) 농민의 역할 강화.

의제21에서 선언된 민간단체의 역할 규정을 보면 전세계의 국가가 얼마나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회적인 동반자로서의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모든 UN 기구들과 각국정부들은 정책의 입안과 정책결정과정에 그리고 시행의 모든 단계에 걸쳐 민간단체들의 참여의 공식적 절차와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민간단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시작해야만 한다.”

작년 6월 브라질의 수도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와 그로발 포럼은 한국의 환경보호 운동에 다음과 같이 3가지의 큰 영향을 미쳤다.

첫째, 그동안 주로 국내 문제에만 국한되어 온 환경운동이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계시민들과 연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둘째, 이제 정부와 기업도 이런 문제에 관해 방관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셋째, 전국민들이 환경문제에 관련된 인식의 폭이 넓어져서 환경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넓어졌다.

환경운동은 수많은 민간의 선각자들에 의해 시작 되었다. 그 이유는 경제정책성장의 입안자가 정부이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은 기업이 맡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재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될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개발에 수반되는 환경오염을 초기단계에는 자연의 자정능력에 의해 그다지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항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환경운동이 현대에 와서는 지역단위의피해자로서의 지구노력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또는 전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보 교류에 의해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지역 또는 한국가에서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라는 점을 알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국경을 넘어서 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 기업이나 한 국가가 아무리 환경보전 노력을 철저하게 전개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다른 집단에 의해 인류 전체가 위협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결국 공동운명체로서의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청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정상회담이나 최근의 여러 국제협약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각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대표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세계운동가들의 입장이다.

셋째, 시민이 단지 피해자가 아니고 환경파괴의 근본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가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환경파괴의 가장 큰

요인을 한마디로 요약 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한 소비의 증가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단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 물질적 풍요를 삶의 목표로 삼는 대량 소비사회, 1회용품이 넘치는 편의추구사회의 모든 소비자는 지구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넷째, 그동안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여겨져 왔던 기업집단이 환경보존운동의 주역의 하나로 급격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파괴적인 생산방식을 전환하려면 고도의 과학기술 지식과 상품 개발을 전제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CFC를 발명 생산하여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져 왔던 듀폰회사가 CFC 대체물질을 발명 하는데도 가장 앞장서고 있으며 미국에서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는 3대 기업의 하나로 선정 되었다. 또한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수 많은 국제기구에 엄청난 금액의 자금 지원을 할 뿐 아니라 듀폰회장은 국제 환경운동의 최대 스타중의 하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물론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고 마치 화장을 하듯이 필우나 정도만큼만 이미지개선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시민 운동이 기업집단을 공격 1호로 선정해 놓고 투쟁해 왔던 활동 방식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과 시민들이 적대관계만이 아니고 동반자적인 관계도 가질 수 밖에 없도록 사회여건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환경운동은 기업의 반공해적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도 대기업이 항상 법규를 위반하면서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수준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환경운동의 폭이 이에 맞추어 넓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경운동의 기본적인 여건이 급속히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환경 운동도 이에 맞추어 운동 방향이 재개편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민간환경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첫째 피해자의 지역지구 운동, 둘째 가해자의 생활방식 변화 운동, 셋째 전문가로서의 대안제시운동, 넷째 구매자의 기업압력 운동, 다섯째 유권자의 정치압력 운동 그리고 국제환경단체들과의 연대 운동 등 6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2. 환경보전을 위한 한국의 민간환경운동의 6대 과제

(1) 피해자로서의 지역 지구 운동

한국에서는 60년대 부터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화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기업이라는 인식하에 공단부근의 주민들의 항의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단위 운동은 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격렬한 시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공해문제를 다루는 사회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공해추방 운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각종 사회단체들이 대도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 거대한 댐의 생태계 파괴문제를 제기하는 운동, 골프장의 과도한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 각종 강살리기 운동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지역운동들은 얼마전 안철도 핵폐기물 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주로 지역단위의 피해 지구책 및 피해의 사전 예방 운동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은 이제 지역이기주의라는 반격을 받고 있다. 이른바 NIMBY(Not In My Before Yard) 현상, 즉 우리가 사는 곳에는 안된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공장이든, 쓰레기장이든, 발전소이든지 간에 아무 곳에도 새로 설치할 수 없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바로 경제활동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지역 단위 운동이 이와 같이 독자적으로만 전개될 때는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시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개별적인 행동으로 고립되어 해결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이러한 지역단위 공해추방운동이 갖는 또 하나의 결함은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지 반대만을 한다는 데 있다. 공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화학 위주의 대규모 공해산업이 문제의 원인인 것 만은 틀림없으나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일반 시민의 소비 상품이든, 또는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 상품이든지간에 공장을 함부로 폐쇄 할 수는 없다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공해방지 시설을 충분히 갖추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 및 운영비 투자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는 채산성 악화로 인해 노동자 임금의 억제, 소비물가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즉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막대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 기업 자체의 경영에 큰 압박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언제나 비용 부담을 사회에 전가시킬 수 있으며 최종 부담은 언제나 소비자가 지게 마련이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도 적지를 찾기가 힘들고 매립장 반대운동으로 인해 지역 지지도 점점 어려워 진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운동이 결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운동은 시민운동과 결합할 때 만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운동이 지역사회 공해피해주민들로 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지역운동단체(CBO, Community Based Organization)와 민간운동단체(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성립과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르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하려면 환경운동의 제 1세대에서 주력을 두었던 초보적인 공해반대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운동의 역할은 단지 지역주민들만을 편들어 같이 대모를 하고 반대투쟁을 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환경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해 주고 그들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NGO와 CBO와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단지 문제의 제기 운동뿐만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과 실천운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협조없이 실질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민간 환경운동은 정부와 기업 지역주민들간에 생기는 갈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국민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곧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민간 환경운동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정착에 의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르 낼 수가 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지방자

칙의 가장 기초단위인 통반장 조직이나 반상회등이 지역단위의 새마을 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 등과 결합할 때 그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순수 민간운동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호남경운도영 관변단체가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차피 환경운동은 폭넓은 국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누구도 참가할 수 있지만 관변단체의 경우는 그 목적이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표면적인 목적과는 달리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여는 순수한 활동이외에는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이 과연 순수한 목적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난 후에 자생력을 가지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가를 보면 도리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단체를 지원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지 않고 순수한 민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환경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면세혜택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 가해로서의 생활방식 변화운동

시민 스스로가 환경오염의 주범일 수가 있다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생겨났다.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무절제한 전력의 사용증가, 자동차 사용증가, 1회용품 사용증가 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의 공해배출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자원 절약이나 재활용 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등이 사회적이 호황속에 폭 넓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현대 사회의 소비행위가 가물론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일정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대체로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소비생활을 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소비행위는 기업이 판매전략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의식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낭비적인 소비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육류 소비량의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자. 선진국의 육류 소비량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10배 정도 높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한 육류 과소비 집단들의 고급식탁을 위해 세계 인구 수의 2.5배가 넘는 130억 마리의 가축들이 사육되고 있는데 이 동물들을 기르기 위해 사용되는 사료용곡물은 전세계 곡물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사육지는 또한 과도한 분뇨의 방출로 직접적인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결국은 토지를 죽게하여 경작지의 사막화를 촉진시킨다. 그 결과 식량문제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예가 기사하는것은 환경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육류섭취행위가 지구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해가하기 위해서는 육류섭취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 경우도 아무리 공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해방지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이용의 증가 그 자체가 과도한 자원의 사용, 즉 철강 유리 프라스틱 등의 중화학 공아밀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가용 이용확대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 보급하지 않으면

급속한 환경오염을 막을 길이 없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선진국,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부유층들의 과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후진국과 저소득층의 문제는 더 악화 될 수 밖에 없다.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의제 21의 초안에서 이러한 선진국의 생활양식에 대한 제한 조치가 제안되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로 최종합의문성에서 상당 부분 삭제되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생활 양식은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환경문제의 본질은 단지 공업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공해물질의 축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자원하에서 후세대까지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감에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속도를 늦추고 생활의 편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소비자체를 축소하려는 대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자원의 사용과 공해의 피해가 민족별, 계층별, 연령별, 성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 남북간의 문제 계층간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인 시민 스스로가 또는 법규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소비절약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룩하지 않는다면 모든 환경운동은 겉치레에 불과한 의미없는 운동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오늘날 환경무제가 급속하게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적그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개발도상국들이 급속한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데 대한 지구차원에서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 생기는 공해의 발생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속도로 자원 소비가 일어나면 결국 치열한 자원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자원의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생기 선진국들이 자원 획득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그들의 소비 생활 자체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제적인 압력에 대항하여 후진국의 국민들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를 위해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개발권을 하나의 인권으로 설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선진국의 어떤 압력도 후진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진국이나 중진국들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지구를 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전문가로서의 대안제시 운동

민간 환경운동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전문성이 결여이다. 이렇나 환경운동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 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시위와 캠페인 그리고 강좌 등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전문적인 연구보고서 한권을 펴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이처럼 치밀한 연구나 분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감상적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전문성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환경문제의 재기가 결과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지 원인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시적으로 분명한 공해 물질의 배출을 대상으로 항의하는 것은 단지 상식만으로도 가능하다. 자연을 사랑하고 동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운동도 감상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열심히 우유팩을 모아서 재생화장지를 만드는 운동도 주부들의 성의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체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처럼 많은 선의의 환경운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둘째, 조직구성이 친목회 수준의 소규모 클럽 형태로 되어 있고 연간 예산이 수백만원이상 되는 단체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별로 없다. 이와 같은 영세적인 조직형태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은 몇몇이 모여서 작은 실천운동이나 의견교환을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소조직들이 수천 수만개가 되면 그러한 힘이 모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잠재력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주요 민간단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고 도와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셋째, 환경운동이라는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 사회분야와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정책과 토지정책, 세제와 금융정책, 산업정책과 농업정책, 주택과 교통정책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는 실효성있는 대안제시가 불가능하다. 사회전체가 어떤 힘과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환경문제의 말단적 현상에만 시각이 집중되어 있는게 우리의 환경운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간단체의 전문성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하난의 예를 들어 보면 생애주기분석 논쟁이 있다. 환경문제 분석의 새로운 틀로 각광받기 시작한 생애주기분석(Life Cycle Assessment)이 처음 소개된 것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필요로 했던 기업들이 이른바 "그린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때문에 LCA는 출발점부터 환경운동계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비운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와 시민운동계에서도 이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LCA에 대해 새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료의 가공 처리 소비의 전과정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분석한다고 해서 생애주기평가라고 불리우는 LCA 분석 결과 천기지귀는 합성세제의 대량사용으로 인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수도물의 대량사용으로 귀한 수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세탁기의 사용으로 전기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더 많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종이기지귀는 원료가 유기성 재료인 펄프이기 때문에 이를 유기물 비료로 만들 수 있어 자원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펄프가 주로 원목을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나무의 가지치기를 해서 원료를 충당하기 때문에 일대림을 파괴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미국에서는 종이기지귀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공격이 완전 중단되고 천기지귀를 생산하던 회사들이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종이기지귀의 사용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측면의 필요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것인데 여성의 가사노동문제에 대한

해결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를 보면 마치 한 쪽에서는 하이테크의 스킵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재래식 보병 소총을 들고서 제대로 싸움을 시작조차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스킵드 미사일에 대해 페트리이트 미사일이 필요하듯이 환경운동계는 이제 하이테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에 와서 하이테크 반격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독일에서 개발된 최신형 "재사용 기저귀"의 개발이다. 독일에서 이미 15 퍼센트 정도 시장점유를 하고 나날이 사용율이 높아가고 있는 이 새 기저귀는 빨아서 수백번씩 재사용이 가능한 하이테크 제품이다. 이 신형 재사용기저귀와 일회용 종이 기저귀의 LCA 분석 결과를 보면 전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재사용기저귀의 환경보존효과가 탁월하여 일회용 종이기저귀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폐하고 말았다.

최근 환경마크위원회에 민간단체 대표들을 다수 참여시켜 환경마크제도를 확대발전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몇명 모여서 피상적인 논의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 지가 의심스럽다.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담보하는 전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민간단체의 참여는 장식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일정 수준이상의 조직과 예산을 갖춘 단체들이 늘어나야 하며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들을 소규모 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가 만들어 져야 한다. UNDP와 YWCA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SD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최신 국제정보들이 한국어로 가공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효용가치는 전문가 몇 사람에게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국제적인 환경운동단체들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자료들과 성명서들은 이제 어떤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그러나 한국내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자료들을 만들어 낼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환경운동의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전환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전문성 확보문제는 이제 환경운동의 존재가 걸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4) 구매자로서의 기업압력 운동

기업집단들의 자본축적과 이윤추구 활동이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주범이라고 하는 구조적 문제는 사회주의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부터, 즉 산업혁명의 태동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이태오르기 문제로 비약시키고 자본주의 내재적 모순으로 분석해 왔던 그간의 좌경운동권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 장막 속에 가려져 모르고 있던 소련 및 동구권의 환경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환경문제에 비해 더욱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경제붕괴 상태에 이른 요즈음 해결책도 거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

이후에 나타났듯이 서독에 비해 동독의 환경과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도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한계를 들어내고 있는 좋은 예이다.

그 주된 요인은 시장경제 체제는 구매자이며 소비자인 시민들이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데 비해 국영기업 위주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도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침쟁 빠진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환경과괴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고려를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 단체인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감시와 고발의 기능이다. 환경운동의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이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인식되어야 한다. 이제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항의하는 정도에서 발전하여 주민들과 함께 오염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전문적인 감시운동을 하는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는 제품의 환경적 속성을 비교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운동이다. 소비자 상품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어느 제품이 환경적으로 건전한지 아니면 파괴적인지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수입농산물과 농업 가공품의 화학약품 오염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고하는 캠페인은 그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소비자운동단체들이 벌이는 이런 운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분석 실험장비를 충분히 갖출 때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셋째는 소비자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아르 선택적으로 취급하는 생산협동 운동이다. 무공해 또는 저공해 유기농산물 공급이 도시 농촌 적거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게 하는 동시에 유기농업 농가의 재산성을 확보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협동 운동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 될 수 있다.

넷째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에서 심하게 공해 방출을 하는 기업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상품불매운동을 벌리는 일이다.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 구호가 단지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생존은 순전히 소비자의 구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경쟁사회일수록 특정기업에 대한 상품불매운동은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패낭소비자협회는 13만부의 소비자 보호보고서를 출판배부하고 있는데 이보고서에서 특정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 다음날로 그상품의 매상이 반이하로 떨어진다. 기업체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견제책은 없다.

민간단체가 이처럼 소비자의 측면에서 기업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환경운동을 전개하려면 기업의 생산과정의 개혁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은 자원의 획득과정에서부터 생산과 유통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 즉 소비자의 구매행위 이전 단계에 까지에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문제제기와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환경운동의 대상이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사가 최종단계 (End of Pipe)의 폐기물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가능한 개발의 본질적인 해결이 생산과정에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 총량규제를 하면 기업이 내부과정을 알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의 규제가 정책적 효율성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

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규제하면 대체로 최종단계의 오염처리시설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인 대처를 하기 때문에 생산비만 상승하여 결국 원가의 추가부담으로 경쟁성을 잃거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생산공정상의 원료의 이용이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의 현재의 관행을 대폭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폐기물 발생후의 처리에서 폐기물 발생 예방 차원으로 압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환경선진국들의 대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우뚝다가 절감하여 이윤이 오히려 상승하는 동시에 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이는데 성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그린피스는 조직의 주요간부들이 그린피스와는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기업의 생산과정개혁을 자문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논란은 있었으나 이제는 당연히 필요한 방식이라는데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민간단체의 관계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러한 방식의 전개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5) 유권자로서의 정치압력 운동

환경보호 운동은 절대적인 타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한나라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전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소비자의 힘이 크더라도 기업활동에 근본적 제약을 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 집단이 기업 집단의 재정적 후원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정경유착의 정도가 심할 경우 환경운동은 다분히 정치적 성향을 띌 수 밖에 없게 된다.

선진 국가들의 환경문제를 적어도 국내에 한정되어서 볼 때 비교적 많이 해결되어 있다. 그 원인은 우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축적된 자본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화 공업화의 선진국가로서 우리보다 몇십년 전 부터 환경문제에 관한 시민운동의 압력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공통적인 특징중의 하나는 정청거으로 민주화가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언론 자유, 즉 집회와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전제되어야만 충분한 시민의식이 형성되고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후진국일수록 시민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그결과로 환경적으로도 후진국이 된다. 정치적인 압력의 수준은 다음의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유권자로서의 환경후보 지원 방법이다. 의회나 지방자치장 선거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전인 정책을 약속하는 후보를 지원하여 당선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재임기간중에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물론 다음 선거에서 낙선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회나 지방의회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내에서 친환경적인 인사들이 많이 진출할수록 환경문제 해결의 전망은 커지게 된다.

둘째는 정부의 정책 개혁 촉구 운동이다. 환경에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법률제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 하여 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채택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모든 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의 입장과 지역사회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이른바 상향식 정책 결

정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환경정책이 마치 환경처의 정책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본래 환경처는 그 출발이 보사부의 한 부서에서 환경청으로 독립했다가 국무총리 산하의 처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다분히 그 시각이 오염관리 수준에서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처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

한 나라의 국가 환경정책은 당연히 국가 전체의 경제개발 및 산업정책과 국토 관리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현재의 환경처는 이러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은 민간단체들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조직화할 때만이 가능하다.

셋째는 환경운동가들이 직접 정치일선에 뛰어드는 것이다. 스스로 정당 추천 또는 후보가되어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서독의 녹색당이나 스웨덴의 환경당처럼 환경보전의 녹색이념 정당을 결성하여 정권에 도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 시민운동은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독재집단과 재벌집단이 중앙집권적인 방법으로 모든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시대가 지나고 지역에 뿌리를 둔 평범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환경보전운동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훈련을 받고 합법적 사회운동을 정착시키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좁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할 경우 보다 종합적인 과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주요정당에 의해 영역을 잠식당해 결국 영향력이 축소될 수가 있다. 따라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독립된 환경당의 형식보다는 기존 정치권의 일부로서 환경문제를 주요한 정치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국제환경운동과의 연대 운동

지구환경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각국정부의 이해갈등구조 때문에 많은 협상이 그러한 자국이익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수히 환경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환경단체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영향력의 정도나 주로 다루고자 하는 과제에 따라 다양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로 그들의 역할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단체로서는 그린피스나 지구의 친구들과 세계야생보호기금(WWF), 제3세계 네트워크 등 잘 알려진 국제환경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세계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전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중에서는 생태주의적인 입장에서 '보호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과격한 방법으로 '현장투쟁'을 벌이는 단체가 있고 국제 협상 과정에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단체가 있다.

이러한 단체들과 한국의 단체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이 좋은가가 이제 중요한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크게 보아 이들 국제단체들의 지부조직을 만들어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부터 사안별 연대를 하는 방법 등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지부조직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이론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고 또 국제적인 현안문제에 대해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국제적인 회의참여나 행동보조를 위해 드는 막대한 경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들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국내적인 호응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안별로 연대하는 것은 물론 큰 부담이 없고 그 사업자체가 반드시 장기적인 자금확보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선 시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저쪽이 주도하는 캠페인에 이름을 올리거나 팩스를 보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구조적 연대이든 사안별 연대이든간에 우리의 전문성이 빨리 제고되지 않는 한 이들과의 실질적인 연대는 사실상 어렵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면 외국단체들이 보내오는 각종 현황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국제적 연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내적 정보교환 네트워크가 시급하다.

지구환경문제의 현실적인 갈등구조의 하나는 고도의 경제시장을 이룩하고 파괴기적인 자원 낭비를 하고 있는 선진국과 경제개발을 겨우 시작하고 있는 빈곤국가간의 갈등이다. 선진국가들이 오늘날의 환경파괴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제환경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단체들로 바로 선진국의 환경단체들이며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막대한 환경운동 자금도 역시 선진국의 환경의식이 있는 인사들에 의해 조달된 것이다. 이처럼 파괴도 보호운동도 모두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환경파괴에 대한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후진국 또는 제3세계는 이에 비해 비교적 늦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급격한 속도로 운동이 활발화되고 있다. 이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원보유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국제적인 자원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다. 또한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인해 각종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경제개발의 시초부터 환경문제로 인해 각종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경제개발의 시초부터 제동을 걸리게 되는데서 오는 불만도 가득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3세계국가의 민간환경단체들은 자국의 정부에게 압력을 가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선진국이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관철시키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UNCED 과정에서 제3세계의 민간단체들이 벌인 활동의 내용은 실로 괄목할 만하다. 몇년간에 걸친 이들의 노력은 결국 UNCED에서 그로벌 포럼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선진국의 양보도 얻어내는데 기여했다.

이에 비해 우리의 환경단체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울 정도다. UNCED에 60여명이 참석하게 된 것은 급히 준비된 것이긴 해도 일단 국제환경의 대립현장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움직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은 근본적인 한계가 앞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AGENDA 21의 시라를 점검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CSD가 만들어지고 그안에 NGO그룹을 별도로 조직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회의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우리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자체적으로 완전히 비판받아야 한다. 이번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CSD 회의에 경실련에서만 3명이 참석했는데 이러한 한계를 하루 속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국내문제에 한정되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이 지구환경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목재공업과 해외벌목사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해산업이 제3세계에 진출하여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어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국제갈등구조속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자국의 이익보호와 지구환경의 파괴문제속에서 민간단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다. 이론적으로 영향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의가 불충분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환경단체들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여 이론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의 과제가 이제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환경운동단체들은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환경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한다. 중요한 점은 세계의 모든 환경운동의 연대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지구환경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의 미래는 공동의 것이기 때문이다.

3. 환경보존을 위한 민간운동의 방향

(1)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중요성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간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폭넓게 확산되고 있고 국제적인 기구에서도 민간단체의 참여를 공식화시키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민간단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간단체들이 그러한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환경운동이 대안제시보다는 문제제기 운동이나 소규모의 생활 실천운동의 한계속에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조직력을 가진 정부의 정책이나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기업의 환경적 프로그램을 넘어설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능력을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극히 제한적인 역할 밖에 할 수 없고 민간단체의 필요성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환경운동이 체제내부화하는 과정을 촉진시키게 되고 결국은 민간환경운동의 존립 기반 자체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환경운동이 전 사회적인 과제로 확대되면 될수록 이른바 전문환경운동의 영역이 축소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운동이 활발한 영국에서는 시민 10인당 1명이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운동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특수한 운동이 아니고 일반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위해 모든 사회단체들의 프로그램에 환경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주부운동을 비롯하여 노동운동, 청년학생운동, 종교운동, 지역사회개발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환경운동은 전문 환경단체의 운동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하는 범사회적인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시민운동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행동전략을 논의하는 세계시민운동이 필요하다.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그로발 포럼에 3만여명의 시민단체대표들이 모이게 된 것도 이러한 국제연대의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각국의 정부대표단들이 국익차원에서 자국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가 하면, 다국적기업들이 자유무역의 기치아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지구를 지키기 위한 평범한 시민들의 단결된 힘만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환경회의의 주제는 "하나뿐인 지구"였다. 그후 20년만에 열린 유엔환경개발회는 "우리의 손으로"라는 보다 행동적인 구호를 채택했다. 스톡홀름에서 리우까지의 20년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고 의식전환을 촉구하는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20년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과 행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로발 포럼은 보다 적극적인 "우리는 그것을 실현시킬수 있다." 라는 표어를 선정했다. 이것은 민간단체들의 환경운동이 그동안 지구보호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계속 맡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운동의 지향 목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운동에 민간단체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지만 그러한 환경운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에 CSD에서 채택된 향후의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지속가능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된 것은

- 1)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개발 촉진과 관련된 국내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 2) 빈곤과의 싸움
- 3) 소비행태의 전환
- 4) 인구의 동태학과 지속가능성 등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선진국이 후진국의 지원을 수탈하여 자원의 과소비를 통한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후진국의 빈곤문제는 지속화되고 자원개발로 인해 환경파괴가 자행된다. 이 과정은 물리적인 군사강점과 식민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예속화를 통해 진해되기도 한다. 자원이 풍부하지만 개발능력 없이 아직도 빈곤속에 있는 대부분의 제 3세계 국가들은 지금도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2단계에서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공해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고 그동안 자국 환경의 혁신적 개선을 이룩하여 환경대국임을 자처하게 된다. 한편 후진국들은 공해산업의 도입을 통해 경제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특징은 저임금 노동시장화와 공해성 제조업의 증가로 나타나 급격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지구환경문제를 이유로 국제적 환경압력이 가중되기 시작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저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동시에 저에너지 소비경제

체제로의 이러한 환경 규제에 의해 개발전략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후진국들은 개발권을 인권문제 차원에서 제기하고 경제개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4단계에서는 선진국들이 태도를 바꾸어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개발보조금의 지급과 환경기술의 이전에 협조하는 방향에 동의를 하게 된다. 또한 소비생활을 자제하고 후진국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을 지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후진국들은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전략의 실행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작년의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된 것이 바로 이 4단계로의 진행이다. 그 때문에 이번의 CSD에서도 자금지원 문제와 환경기술의 이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환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생산과정에 있어서는 자원낭용시대에서 자원절약시대로
- 2) 빈부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의 집중시대에서 분배의 형평시대로
- 3) 기업체의 역할은 사후 폐기물처리 시대에서 사전 폐기물 감소시대로
- 4) 소비자의 생활방식은 낭비적 소비시대에서 검소한 소비시대로, 또한 일회용사회에서 순환형 사회로
- 5)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시대에서 유기농업시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 6) 남북문제 해결과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국가 이기주의 시대에서 국제협력 시대로 각각 전환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이제 더이상 논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이미 명확한 개념 설정이 되어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체적인 실력을 축적해 나갈 것인가이다.

이제 한국의 민간단체들의 환경운동은 환경개선을 요구만하던 권리의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책임과 의무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준비하는 환경운동

1. 전반적 방향

1995년 환경 사업을 계획하면서 우리는 먼저 몇가지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이 환경문제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인가? 그 원인은 이제까지 어떤 양상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 현재 급변하고 있는 사회 질서의 흐름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 속에서 환경운동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은 환경운동을 하고자 하면서 누구나 늘 지니게 되는 것이지만, 의외로 운동의 현실 속에 함몰되면서 잊기도 쉬운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환경운동은 이 물음을 늘 모든 행동의 기저에 지니면서, 행동을 통해 끊임 없이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이고자 한다. 그 노력은 단기적 사업 목표 속에서 일부분 성취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 없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변혁을 시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0세기적 생존 방식의 근본적 한계

1995년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해방 반세기는 또한 유엔 창립 반세기를 맞으며, 동시에 21세기를 눈 앞에 둔 해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거의 반세기동안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되었으며, 거기 맞추어 인류 사회의 모든 구조,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그 질서는 명분으로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맞추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연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착취하여 보다 많은 경제적인 이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치경제구조를 형성해가는 과정이었다. 자연자원, 생태계의 정화능력의 한계를 외면하고 빈부의 격차, 전반적인 생활의 질 저하, 각종 사회병리 현상의 증대에 박차를 가해 온 이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우리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아니 신성시해왔고 현재도 그러고 있다.

이 과정은 지속될 수 없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구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는 그 구조를 유지하고자 애쓰는 기득권층조차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순으로 인한 파국이 우리 눈 앞에 선명하게 다가와 있다. 외면할 수 없는 환경위기가 우리 모두의 잘못을 또렷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해왔던 사회문제들은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계층과 이익을 보는 계층이 구별되었지만, 환경위기는 인류 모두에게 미래가 없다는 위협이다.

협오시설로 인한 지역내 분쟁에서부터 지구상의 전 생물을 궁극적으로 괴멸시키게 될 오존층 파괴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는 이 지구상에서 이제까지 영위해온 인류의 경제활동 방식,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사회문화적 존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서 행해져왔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원 및 이를 제공하는 환경자원은 무한하고, 이를 이용한 경제활동의 부산물, 즉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전제였다. 그 결과 환경자원은 급격히 재고가 줄어들었고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 경제활동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그 과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20세기적 질서의 의미

잘못된 경제구조 및 이에 따른 다른 모든 사회구조는 어차피 변화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도 급변하고 있다. 국경 없는 경제, 무한경쟁의 시대, 경제 블록화, WTO 체제 등 새로운 용어들이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알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21세기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새로움, 즉 변화라는 것이 어디서 근본적으로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변화의 동인을 두가지로 요약하자면, 인류가 지닌 절대적·상대적 경제 잠재력의 축소와 정보 통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앞에서 환경자산이 가진 가치와 양적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착취한 결과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의 기반 자체를 잠식해왔다고 말했다. 부의 원천이 되는 자원, 그리고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생태계의 기능이 끊임 없이 축소되어 가고 있어 (절대적 경제 잠재력의 축소) 인구의 증가 및 소비욕구의 향상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를 만족시키기 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다 (상대적 경제 잠재력의 축소).

이러한 시점에서 인류가 현명하다면 어떤 방향 선회를 해야 할까? 당연히 환경자산의 무분별한 잠식을 막고 인구증가 및 소비욕구의 향상을 억제하여, 환경자산을 관리해가며 전 인류가,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세대가 함께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합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다.

현재 전개되는 양상에서 주된 흐름은 기존의 개발 방식이 더욱 공고해지고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주된 경제행위자인 기업은 돌파구를 찾아 외부로, 더욱 외부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보통신의 발달이다. 이 과정에서, 축소되어 가는 경제 잠재력을 의식하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국경을 넘어선 규모의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경제 행위자의 손에 더욱 더 많은 이익이 집중된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서보다 더욱 교묘하고 포괄적인 식민지주의, 소위 신식민지주의가 세계 질서를 규정하는 숨은 원리가 되어가고 있으며,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른바 국제화의 시대, 무한경쟁 시대란 잘못된 경제활동 방식이 인류를 물고 간 파국을 직시하지 못하고 더욱 그 속에 급속도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인간이 그 모양새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자각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힘들도 또한 급성장해가고 있다. 잘못된 현재까지의 사회경제구조를 청산하고, 급변하는 내외 정세,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서 급변하는 인류의 물적 존재 조건에 맞는 새로운 질서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탄생한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끌어가는 흐름으로서 다른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문제야말로 이제까지 인류가 영위해온 방식의 삶이 지니는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또한 그 해결을 위해 싸워온 경험으로서의 환경운동이야말로 이러한 인류의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및 개발 문제의 새로운 전개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공해로 인한 환경 파괴 및 자연생태계의 무분별한 개발에 저항하는 지역운동으로서 성장해온 환경운동은 이제 21세기 시민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사회운동으로 인정되고 있다. 환경운동은 당연히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에 책임

있게 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자세를 성실하게 견지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단순히 환경파괴에 저항하는 환경지상주의적인 입장을 뛰어넘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인 개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상호관계를 잘 이해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급변해가는 사회경제 상황 속에서 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인간의 경제활동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21세기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간략히 점검하고, 이에 따라 환경문제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개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경제개발의 진행을 살펴 보면, 우선 경제활동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이 행해질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 과정은 지방의 자율성 강화, 즉 지방자치의 발달이라는 과정과 함께 나타난다. 이해관계 및 사회적 조건이 조화되어 경제개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지방 단위로서 다른 국가의 지방 단위와 결합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좀더 광역적으로 발전하면 경제 불력을 형성하며, 정보통신의 발달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 과정은 장기적으로는 근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질서였던 민족국가의 틀까지도 해체해갈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일사불란한 질서를 유지해왔던 중국에서 동남 해안지역이 경제개발의 열기에 휘말리자, 이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먹혀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지방화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데, 바로 경제개발의 효율화를 위해서 민족국가의 틀이 무시되는 좋은 예이다.

경제적 지방화의 시대에는 진정한 지방의 경제, 즉 지방을 터전으로 자라온 소규모 경제를 위한 자리가 없다. 국가 내에서 보면 지방화된 경제 체계이지만, 이것은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경을 넘어 각 지방으로 들어가는 산업을 관장하는 것은 그만한 정보 이용 능력과 사업 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에게 집중이 되며, 이들은 점점 개선되는 자유무역을 위한 조건과, 독보적인 위치가 확보될 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어느 지역에서건 쉽게 우위를 점하게 된다. 세계화란 비로 이러한 세계규모의 자본 운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은 새로운 산업의 형태로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던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개발이라 하면 주로 1, 2차 산업을 위해 자연환경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적극적 경제활동의 장인 산업시설을 벗어나, 근처의 쉬고 있는 공간들조차도 여가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이조차 본격적인 사업의 영역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가 꾀해지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일상 경제활동의 효율화를 위해 잠시 여가를 취하는 과정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개발 행위가 산업 및 주거 지구에서 비산업, 비주거였던 휴면 지구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같은 경제활동 방식의 특성들은 20세기에서 자라나온 것이지만, 가속적으로 발전되어 21세기에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인간 경제활동의 모순이 환경에 반영되는 것으로서 환경문제는 이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그 새로움은 양상은 전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순의 누적이 이미 잠복기를 넘겨 격화된 환경문제로서 계속 터져나올 것이며, 인간이 경제력 극대화에 혈안이 됨에 따라 더욱 환경자산이 개발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외면당해 사태는 악화일로로 달릴 것이다. 또한 경제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짐에 따라 모순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바로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모순의 발현, 즉 환경문제의 발생 양상을 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화는 각 지방의 주제적,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파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지역일수록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개발하려는 의욕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이 착취되고 오염이 가중되며, 환경에 대한 고려는 개발 열기 속에서 뒤로 밀릴 것이다. 산업지구의 본격적인 개발은 물론, 이제까지 비교적 보전이 잘 된 지역조차도 리조트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 개발에 희생이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개발을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볼 때, 그로 인한 환경오염 부담은 한국 사회에는 더욱 심각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방들이 묶여 경제 불력을 형성할 때, 한 블록 내에서 지역 특성에 따른 산업간 역할 분담이 일어날 것이다. 이 중에서 개발에 대한 사회적 경험이 미숙하고 기술 축적이 얇은 곳일수록 오염부하가 큰 산업이 집중될 것이다. 오염의 부담은 지리적 조건이 반영되어 특정 지역에 중점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한반도는 중국 동남 해안 지역, 한국, 일본의 북서부를 묶는 환황해안 경제 불력이 활성화되면 그로 인한 환경부담을 집중적으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세째, 국내적으로도 개발로 인한 환경부담이 주는 충격은 심각해져갈 것이다. 환경오염 원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지리학·기상학적 조건에 따라 완충이 되는 정도가 다르다. 우리 나라는 화강암 지질, 수계의 형성 양태, 산지에 둘러싸인 취약 입지 조건, 한냉 건조한 대륙성 기후 등, 일단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수질, 대기가 오염되면 그 영향이 직접적이고 회복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이 본격화되면 그로 인한 단기적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파괴가 초래하는 장기적 경제적 손실이 더욱 클 뿐 아니라,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네째, 이렇게 행해진 개발로 인한 이익은 대개 소수(이 소수는 지방의 권력층 및 그들의 배후까지 밀고 들어온 세계 자본과 연결이 되는 엘리트들이다)에게로 집중되며 피해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 및 향후 세대에 살 자손들에게 전가된다. 피해의 양상은 일차적으로는 환경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 안정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환경질이 악화되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어 지능 저하, 집중력 감소를 초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오염물질이 인간의 신경계통에도 작용하여, 정서 불안, 난폭증, 염세증을 유발하여 사회병리 현상이 대폭 증가한다.

다섯째, 이런 환경 피해에 대한 저항이 더욱 어려워져 갈 것이다. 환경 피해는 지방적으로 일어나지만,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이 모순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그 투쟁의 대상은 엄청난 조직과 사업 관리 능력을 가진 세계적 자본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화, 지방화는 환원하면 세계적 자본의 지방적 운용이다. 개별 산업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는 지방단위로 추진되지만, 이를 움직이는 것은 세계 규모의 대재벌이다.

여섯째, 지역적으로 발생한 환경문제의 적분으로서 나타나는 지구환경문제(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기후변동, 사막화 등)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아직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메카니즘을 통해 환경문제는 상호 작용을 하여, 특정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건강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은 이러한 피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지만, 생태적 지지 기반이 약한 경제체는 아무리 그 구성원이 장미빛 경제개발의 그림을 그리고 그의 실현을 위해 충단결한다 하더라도 환경기반이 붕괴되어 몰락되고 말 것이다.

21세기 환경운동의 과제

이같은 경제적, 환경적 조건을 지니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라는 특성 속에서 환경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한국의 환경운동은 세계화, 지방화의 내용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 지방화가 21세기를 상징하는 구조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멋진 미래상을 의미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점은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축소되어가는 경제적 잠재력을 더욱 착취하려는 노력과 함께 환경 오염 요인 발생은 증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환경의 완충력은 급속히 저하되어 경제활동의 조건인 환경질이 날로 악화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환경인식은 높아지고, 환경보전 노력이 촉구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단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일반인의 상식으로서의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자본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을 때는 일반 시민의 힘으로서 투쟁을 통해 이를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에 있어서의 환경운동은 더욱 더 정교하고 힘겨운 노력을 요구한다. 그 노력은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안적인 개발 방식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인간이 생존해가려면 자원을 포함한 환경자산을 이용하는 과정인 개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류가 지상에서 건강한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개발은 전면 궤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방식의 개발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이 지탱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제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대안적 개발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 이 과정은 동시에 중요 정책 개발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둘째, 지방화의 시대에서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 결정들이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환경을 무시한 무분별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는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직접 이익을 보는 건설업 등 소수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다수의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발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지역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여 개발계획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계획 결정과 추진단계에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셋째, 이런 감시의 눈을 국가의 정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역환경에 영향을 미칠 개발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국토개발계획 등 보다 상위 수준의 정책 결정에 대한 항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더불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이에 근거한 개발계획 통제가 좀 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가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에서 가시적인 환경오염에 직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자본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의 환경 및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중대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중 상당한 부분이 해외 기술을 도입하는 데 나가고 있다. 환경기술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맞지 않으면 외화를 낭비하고 환경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도입되는 기술이 과연 우리 환경에 맞고 비용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기술을 전제로 한 제반 제

도적 장치들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네째, 세계화의 시대에 있어서는 지역적 환경운동에서도 지구적 차원의 연대가 더욱 요청된다. 지역에서의 개발 중에도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지구적 규모의 자본의 움직임에 연계되어갈 것이다. 심각한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기업에 의해 비슷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구적 차원의 연대 운동에 의해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환경운동도 요구된다. 경제의 불럭화에 따라 특정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어 그로 인한 환경 피해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경제개발로 인한 대기, 해양 오염으로부터 피할 도리가 없는 형편에 있다. 인접국가간에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부터의 노력이 절실하다. 동아시아 경제권에서는 한국이 이런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갈 수 밖에 없으며, 정부가 하는 노력을 민간 차원에서 촉구, 지지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여섯째, 인류 공통의 과제인 지구환경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기후변동, 삼림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등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에 관련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인류 전체의 존재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환경단체로서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하며, 국내적으로는 소비자 운동, 정책 촉구 운동 등을 통해 대안적 생산 양식, 소비 방식을 정착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환경단체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전 인류의 과제이다. 이 과제를 추진해감에 있어서 가장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무지, 그리고 기존 질서에서 이익을 보는 계층의 반발일 것이다. 두가지 다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 현안의 진행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며, 다수에게 유리한 결정으로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환경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과정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